

고비 풀린 **국가재정**, 이대로 **관심**은가?

- 일 시 : 2020. 6. 15(월), 오전 10-12시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 최 : (재)여의도연구원, 국회의원 추경호

C O N T E N T S

I	인사말	
○	인사말	4
II	발제	
○	박형수, 연세대 경제학과 객원교수(前통계청장)	10
	“무너지는 재정건전성, 문제점과 회복방안”	
○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24
	“한국의 재정승수, 추정과 시사점”	
III	토론	
○	옥동석, 인천대 무역학과 교수(좌장/前조세재정연구원장)	36
○	김상겸,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44
○	김창배, 여의도연구원 경제사회정책실장	50

‘고삐 풀린 국가재정,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

□ 개요

- 일시 : 2020. 6. 15(월), 오전 10-12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최 : (재)여의도연구원, 국회의원 추경호

□ 취지

- 코로나19 극복의 핑계로 고삐 풀린 국가재정의 현황 및 향후 전망
- 재난지원금 지급 계기로 확산되는 재정악화 불감증에 대한 경계
-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재정규율 확립방안 모색

□ 진행(안)

시 간	내 용
10:00~10:05(5')	○ 개회·국민의례
~10:15(10')	○ 내빈소개와 개회사.축사
~10:20(5')	○ 기념촬영
~11:20(60')	○ 주제발표 - 박형수 연세대 경제학과 객원교수(前통계청장) “무너지는 재정건전성, 문제점과 회복방안” -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한국의 재정승수, 추정과 시사점”
~11:50(30')	○ 종합토론 - 옥동석 인천대 무역학과 교수(좌장) - 김상겸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 김창배 여의도연구원 경제사회정책실장
~12:00(10')	○ 추가 자유토론 / 방청객 질의응답 ○ 폐회사

|| 인사말

반갑습니다.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주호영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연세대 박형수 교수님, 한국경제연구원 조경엽 경제연구실장님, 인천대 옥동석 교수님, 단국대 김상겸 교수님, 여의도연구원 김창배 경제사회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과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문재인 정부는 가계소득이 증가하면 소비도 늘어나 경제성장이 이루어진다는 소위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7년에 시간당 6,470원이던 최저임금을 2018년 16.4%(7,530원), 2019년 10.9%(8,350원)으로 급격하게 인상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영세자영업자들은 인건비 부담에 시달리고 아르바이트·일용직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는 을과을의 전쟁이 되었습니다. 최저임금 상승은 가계의 실질적 소득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정부는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경제성장을 이루고 이를 통해 세수를 확보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했으나, 이론과 실재는 달랐습니다. 정부의 총지출 증가율은 2017년 5.6%에서 2019년 11.7%로 늘어났지만, 경기침체로 인해 총수입 증가율은 같은 기간 5.5%에서 1.1%로 줄어들었습니다. 일자리 예산에 이미 110조원 이상 투입되었지만, 단기·공공일자리 양산에 그쳤습니다.

정부는 잘못된 경제정책 방향을 수정하기는커녕, 그로 인한 부작용을 무차별적 재정투입으로 막으며 버티는 형국이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코로나19 사태까지 덮쳐 우리 경제는 IMF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올해 1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경제위기를 코로나 탓으로 돌리고 있지만,

이미 우리 경제는 풍전등화 상태였음을 각종 지표들이 증명해 줍니다.

2020년 정부 예산은 513조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이유로 벌써 3차례 추경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부가 한 해에 3차례 추경을 편성한 것은 1972년 이후 48년만입니다. 더구나 3차 추경안은 단일 추경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3천억원에 달합니다. 만일 3차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국가채무비율은 43.5%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 대표이던 2015년 당시 386조 7천억 규모의 2016년 정부 예산안에 대해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마지노선으로 여겼던 40%가 깨졌다”, “새누리당 정권 8년 만에 나라 곳간이 바닥나서 GDP 대비 40%, 730조원에 달하는 국가 채무를 국민과 다음 정부에 떠넘기게 됐다”고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40% 마지노선의 근거가 무엇이나’며 재정 당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브레이크 없는 재정 폭주가 계속된다면 우리 경제는 회복할 수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부담은 미래 세대가 떠안게 될 것입니다.

지금 정치권에서는 기본소득이 중요한 화두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상당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본소득 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국가재정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 자리가 마련된 이유입니다.

4차 산업 혁명과 포스트 코로나를 맞는 대한민국 경제 체질이 더 튼튼해 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와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미래통합당은 앞으로도 미래 세대에게 짐이 아닌 축복이 되는 경제 정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미래통합당 정책위원회의장 추경호입니다.



우선 여의도연구원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고삐 풀린 국가재정,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 주제 발표와 종합토론을 맡아주신 연세대 박형수 교수님, 한국경제연구원 조경엽 실장님, 인천대 옥동석 교수님, 단국대 김상겸 교수님, 여의도연구원 김창배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일정 중에도 참석해주신 주호영 원내대표님을 비롯한 여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3차 추경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내년이면 46.2%에 달하고, 文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에는 국가채무가 1천조원을 넘어서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전망조차 지나치게 낙관적인 분석이란 것입니다. 정부는 올해 우리나라가 0.6% 성장한다는 가정을 전제로 삼고 있지만, IMF는 올해 한국의 성장률을 -1.2%, OECD는 코로나19가 2차 확산하는 상황이 닥친다면 -2.5%로 우리 경제가 추락 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채무의 폭증은 文 정부 출범과 함께 미래세대 부담에 대한 뚜렷한 대비책도 없이 퍼주기식 복지정책을 남발하면서부터 이미 예견되어 왔습니다. 우리 당을 물론이고, 이 자리에 계신 최고의 경제 전문가들께서 이러한 우려를 누차 표해왔지만, 국가채무에 관한 문 정권의 인식은 너무나 안이합니다.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폭주하는 문 정권의 재정포퓰리즘이 이대로 계속된다면, 우리의 미래세대들은 국가부도 또는 엄청난 세금폭탄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청와대를 비롯한 집권여당에서는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를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며, 오히려 쉰국민고용보험, 2차 긴급재난지원금 같은 현금 살포 정책의 균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現 정부 들어 급속히 빨라진 국가채무 증가 속도는 물론, 기축통화국·복지수준 등 경제·사회적 여건이 다르다는 점을 외면한 주장일 뿐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기업 및 공기업 부채, 연금 충당 부채 등 감추어진 빚도 많습니다. 국제결제은행(BIS)는 우리나라의 총부채를 지난해 말 기준으로 4,540조원(GDP의 237%)으로 추정했습니다.

소규모 개방경제라는 한국경제의 특성상, 우리나라는 대외충격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건전한 국가재정이 없었다면, 그동안 우리 경제에 닥쳐온 수많은 위기들을 극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現 정권의 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 없이 지금의 재정포폴리즘이 계속된다면, 일본이 겪었던 ‘잃어버린 20년’ 보다 더 암울한 미래가 기다릴 것입니다.

코로나19로 무너진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한 국가재정의 역할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국가채무가 이렇게 급속도로 증가함에도 이를 관리할 기준도 없고, 재정지출의 효율성 점검도 미비한 것은 분명히 개선되어야 합니다.

오늘 토론회가 나랏빚을 관리할 기준 마련과 재정준칙 도입 등을 공론화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나가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정부의 재정 운용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발제1 |

무너지는 재정건전성, 문제점과 회복방안

- 박형수 연세대학교 객원교수 -

무너지는 재정건전성, 문제점과 회복방안

박 형 수 (연세대학교 객원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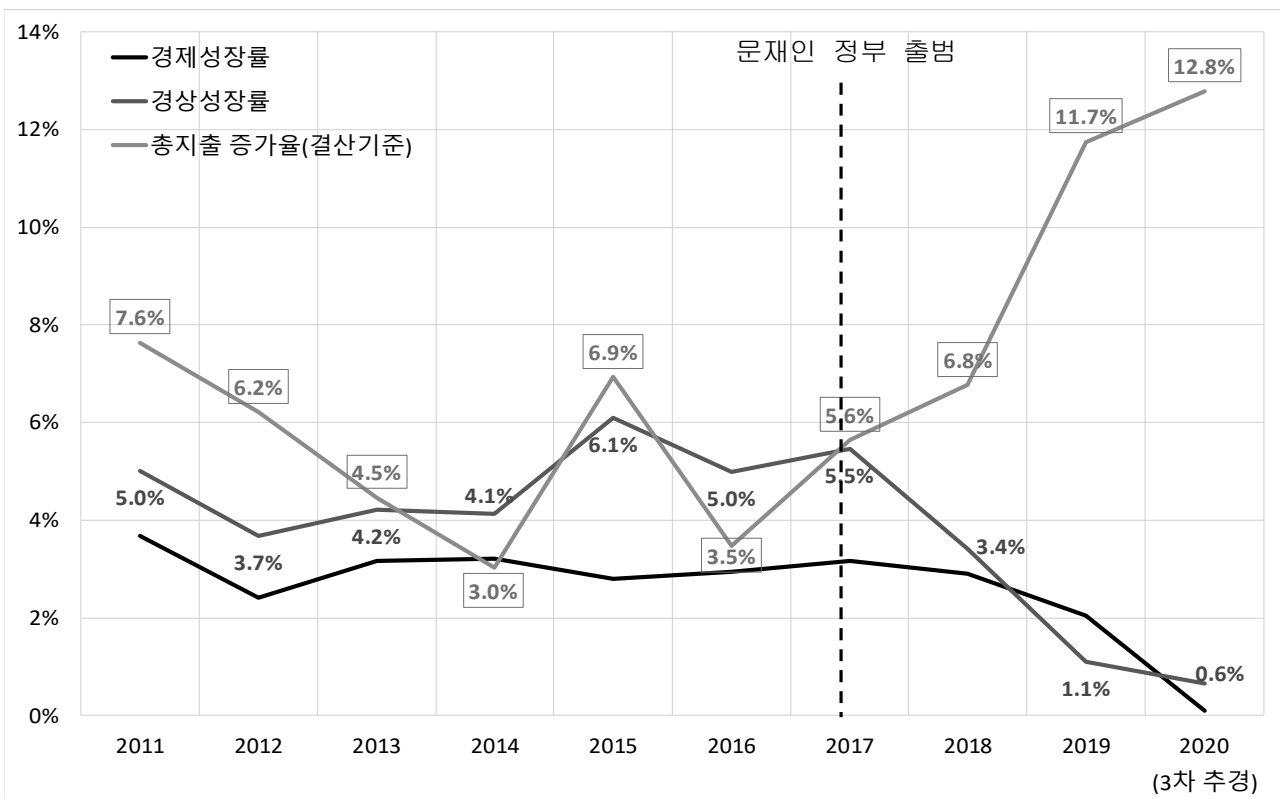
※ II장 & III장 : 박형수(2020.5) “코로나19와 재정관리 강화방안”, 송언석 의원실 정책연구보고서

목 차

- I . 국가재정과 거시경제
- II . 코로나19 전부터 무너지기 시작한 재정건전성
- III . 재정건전성,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

I. 국가재정과 거시경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성장률과 재정지출 증가율 추이



■ **가계와 기업에 영향을 주는 국가재정 활동규모는?** (2018년 제도부문별 국민계정)

- 부담 525조원(GDP의 28%) = 세금(생산및수입, 소득·부) + 사회보험료(4대 보험)
- 수혜 290조원(GDP의 15%) = 기업(보조금, 기타 경상이전) + 가계(현금 & 현물 소득재분배)
 인건비 & 물건비의 정부소비 152조원(8%) + SOC의 정부투자 84조원(4%)

	비금융기업		금융기업		정부		가계		국내 합계		해외	
	사용	원천	사용	원천	사용	원천	사용	원천	사용	원천	사용	원천
GDP										1,893		
■ 총부가가치(기초가격)									1,730	1,730		
■ 생산물세-보조금										163		
본원소득분배(시장을 통한 분배)												
피용자보수								864		864	1	2
영업잉여		320		50		1		114		485		
생산및수입세						195				195		
보조금						-12				-12		
재산소득	158	48	145	134	22	32	36	153	361	367	39	33
2차소득분배(국가재정을 통한 현금소득 재분배)												
소득, 부에 대한 세금	73		14			178	91		178	178		
사회보장 부담금		8		43		152	203		203	203		
사회보장 수혜금	8		29		98			135	135	135		
기타 경상이전	37	27	44	35	69	43	94	131	244	236	12	20
현물소득분배(국가재정을 통한 현물소득 재분배)												
사회적 현물이전					154		34	188	188	188		
소득사용(국가재정을 통한 행정서비스 & SOC 공급)												
소비지출					306		908		1,214			
(실제소비)					152		1,062		1,214			
투자지출	382		12		84		118		596			

항목별 국가재정 활동규모 추이

(GDP대비 규모의 정권별 연평균)

	제4 공화국	제5 공화국	제6 공화국	문민 정부	DJ 정부	참여 정부	MB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부담	17.0%	17.5%	18.4%	19.4%	21.3%	23.4%	24.3%	24.9%	27.5%
생산 및 수입세	11.7%	11.3%	10.1%	10.3%	10.7%	10.6%	10.3%	9.9%	10.2%
소득, 부 등에 대한 경상세	4.6%	4.4%	5.7%	5.8%	6.0%	7.0%	7.3%	7.5%	9.1%
사회보장 부담금	0.6%	1.8%	2.6%	3.3%	4.6%	5.8%	6.6%	7.6%	8.2%
수혜	19.0%	18.2%	18.5%	18.3%	20.2%	22.1%	25.0%	25.6%	27.9%
(기업지원)	1.1%	0.6%	0.6%	0.8%	1.3%	1.6%	1.8%	1.6%	1.9%
보조금	0.4%	0.2%	0.1%	0.1%	0.2%	0.4%	0.4%	0.4%	0.6%
기타경상이전	0.7%	0.4%	0.6%	0.7%	1.2%	1.2%	1.4%	1.1%	1.3%
(가계지원)	4.3%	5.3%	6.0%	6.3%	7.5%	8.8%	10.9%	12.6%	14.2%
사회보장 수혜금	0.7%	1.2%	1.4%	1.6%	2.1%	2.4%	3.5%	4.4%	5.3%
사회적 현물이전	3.6%	4.1%	4.6%	4.7%	5.4%	6.4%	7.5%	8.2%	9.0%
정 부 소 비	7.1%	6.6%	6.1%	5.6%	6.0%	6.5%	6.9%	7.0%	7.3%
정 부 투 자	6.5%	5.8%	5.8%	5.6%	5.4%	5.3%	5.3%	4.5%	4.4%

주 : 제4공화국은 1975~1980년, 문재인 정부는 2017~2019년

항목별 국가재정 활동규모의 정권별 변동규모

(정권별 연평균 규모의 증감, %p)

	제5 공화국	제6 공화국	문민 정부	DJ 정부	참여 정부	MB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자유 우파	진보 좌파
부담	0.5%	0.9%	0.9%	1.9%	2.1%	0.9%	0.7%	2.6%	0.8%	2.2%
생산 및 수입세	-0.4%	-1.2%	0.2%	0.4%	-0.1%	-0.3%	-0.4%	0.3%	-0.4%	0.2%
소득, 부 등에 대한 경상세	-0.3%	1.3%	0.1%	0.2%	1.0%	0.3%	0.2%	1.6%	0.3%	0.9%
사회보장 부담금	1.2%	0.8%	0.6%	1.3%	1.2%	0.8%	0.9%	0.6%	0.9%	1.1%
수혜	-0.8%	0.3%	-0.2%	1.9%	1.9%	2.9%	0.6%	2.2%	0.5%	2.0%
(기업지원)	-0.5%	0.1%	0.2%	0.5%	0.2%	0.2%	-0.2%	0.4%	0.0%	0.4%
보조금	-0.2%	-0.1%	0.0%	0.0%	0.2%	0.0%	0.0%	0.2%	0.0%	0.1%
기타경상이전	-0.3%	0.1%	0.1%	0.5%	0.0%	0.2%	-0.3%	0.2%	0.0%	0.2%
(가계지원)	1.0%	0.7%	0.3%	1.3%	1.3%	2.1%	1.6%	1.6%	1.1%	1.4%
사회보장 수혜금	0.4%	0.2%	0.2%	0.5%	0.3%	1.1%	0.9%	0.8%	0.6%	0.6%
사회적 현물이전	0.5%	0.5%	0.0%	0.8%	0.9%	1.1%	0.7%	0.8%	0.6%	0.8%
정 부 소 비	-0.5%	-0.3%	-0.5%	0.3%	0.5%	0.4%	0.0%	0.3%	-0.2%	0.4%
정 부 투 자	-0.7%	0.0%	-0.2%	-0.2%	-0.1%	0.0%	-0.8%	-0.1%	-0.3%	-0.1%

주 : 제4공화국은 1975~1980년, 문재인 정부는 2017~2019년

■ 국가재정은 거시경제에 얼마나 영향을 주나?

○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느냐, 어디에 지출하느냐에 따라 장기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짐

재원조달		재정지출	생산적 지출	비생산적 지출
조세	비외목적 조세		(+)	0
	왜목적 조세		규모 작을때 (+) / 규모 크면 (-)	(-)
재정적자/국가채무			?	(-)

- 세입항목별 장기승수

	Bleaney et al. (2001)	재정수입승수	
			Gemmel & Kneller(2002)
소득세	왜목적 조세	-0.411 (0.05)	-0.337 ~ -0.395
법인세			
사회보장기여금			
재산세			
부가가치세	비외목적 조세	0으로 전제	
특별소비세			
기타간접세			
관세, 기타 세수	기타 조세	0.040 (0.06)	
세외수입	재정적자	-0.105 (0.06)	-0.068 ~ -0.121
차입 또는 국채발행			

주: ()내는 표준오차

- 세출항목별 장기승수

	Oxley & Martin (1991) Saunders(1993)	Bleaney et al. (2001)	재정지출승수	
				Gemmel & Kneller (2002)
일반공공행정	순수공공재 (Pure goods)		생산적 지출	0.387 (0.07)
국방				
공공질서·안전	가치재 (Merit goods)		비생산적 지출	0으로 전제
주택·지역개발				
보건				
교육	경제사업 등			
경제(운수·통신)				
경제(기타)	이전지출			
오락·문화·종교				
사회보호	기타		기타지출	0.040 (0.07)
기타				

주: ()내는 표준오차

- 최근 우리나라 재정의 장기성장 효과가 하락하고 있는데, 이는 지출측면의 (+) 효과에는 큰 변동이 없는 가운데 왜곡적 조세의 (-) 효과가 커지고 있기 때문
 - Bleaney, Gemmell & Kneller(2001)의 세입·세출 항목별 장기재정승수를 적용해 추정

국가재정의 장기성장 효과에 대한 정권별 추정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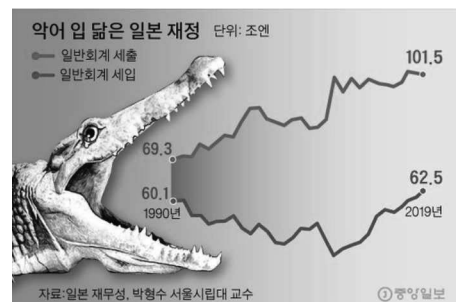
		제4 공화국	제5 공화국	제6 공화국	문민 정부	DJ 정부	참여 정부	MB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세입	왜곡적 조세	-2.35	-2.48	-3.73	-4.37	-4.90	-5.94	-6.41	-7.02	-8.03
	비왜곡적 조세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기타 조세	0.24	0.33	0.29	0.27	0.33	0.35	0.37	0.32	0.29
	재정 적자	0.22	-0.01	-0.17	-0.25	-0.24	-0.10	-0.07	-0.15	-0.29
	(세입 소계)	-1.88	-2.14	-3.62	-4.34	-4.81	-5.69	-6.11	-6.85	-8.03
세출	생산적 지출	7.26	7.55	6.69	6.91	7.65	8.92	9.07	8.56	8.57
	비생산적 지출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기타 지출	0.02	0.02	0.03	0.03	0.03	0.04	0.04	0.03	0.03
	(세출 소계)	7.28	7.57	6.71	6.94	7.68	8.95	9.10	8.59	8.60
	장기성장 효과 합계	5.40	5.41	3.10	2.60	2.87	3.26	2.99	1.74	0.57
증감	합 계	-	0.01	-2.32	-0.50	0.28	0.39	-0.27	-1.25	-1.17
	(세입)	-	-0.27	-1.46	-0.73	-0.46	-0.88	-0.42	-0.74	-1.18
	(세출)	-	0.29	-0.86	0.23	0.74	1.27	0.15	-0.51	0.01

주 : 제4공화국은 1973~1980년, 문재인 정부는 2017~2018년

- (2020년) 정권초 2년과 달리 재정수입은 감소하는데 재정지출은 가속적으로 증가 중
 - 잃어버린 20년의 일본 재정처럼 우리 재정도 '악어의 입'이 시작됨!
 - 국가재정은 악화되지만 왜곡적 조세 감소로 성장 효과는 정권초 2년보다 클 수 있음

- 세금, 사회보장 부담금 등 국민부담은 2019년부터 증가규모가 급격히 둔화
 - 국세: '16 242.6조 → '17 265.4조(+22.8) → '18 293.6조(+28.2) → '19 293.5조(▲0.1) → '20 본예산 292.0조(▲1.5) → 3차 추경 세입경정 ▲11.4조
- 반면, 총지출은 슈퍼 예산에 이은 2차례 추경 편성을 통해 지난해 본예산 대비 62조원 증가
 - 총지출: '16 398.5조 → '17 410.1조(+11.6) → '18 432.7조(+22.6) → '19 469.6조(+36.9) → '20 본예산 512.3조(+42.7) → 3차 추경 세출확대 +34.8조

- 2차례 추경의 항목별 증가 규모
 - 사회보장 수혜금 & 사회적 현물이전 +27조
 - 정부소비 +20조(지방재정 지원 포함)
 - 보조금 & 기타경상이전 +10조
 - 정부투자 +6조



II. 코로나19 전부터

무너지기 시작한 재정건전성

■ (코로나19 이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미 경제와 국가재정이 악화되기 시작하였음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미 3% 경제성장도 달성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활력이 저하된 상태
 - 경제성장률: 2017 3.2% → 2018 2.7% → 2019 2.0%(코로나19 발발 이전 전망치)
 - 투자 기여도는 마이너스(-)인 반면 정부기여율이 높아져 경제성장의 내용도 좋지 않음
 - 투자지출 기여도: 2017 3.3%p → 2018 ▲0.6%p → 2019 ▲0.8%p
 - 정부소비지출 기여도: 0.6%p → 0.9%p → 1.1%p
 - 정부투자지출 기여도: 0.1%p → 0.1%p → 0.5%p
 - 이에 코로나19 발발 이전에도 이미 기업 및 소비자들의 경제심리가 최악의 수준

- 재정지출이 급증하는 반면 재정수입 증가는 둔화되어 재정적자 규모가 증가
 - 경상성장률 : 2017 5.5% → 2018 3.1% → 2019 1.1% → 2020(본예산) 3.8%
 - 총수입 증가율: 7.2% → 8.1% → 1.7% → 1.8%
 - 총지출 증가율: 5.6% → 6.8% → 11.7% → 5.6%
 - 재정적자/GDP: 1.1% → 0.6% → 2.8% → 3.5%

- 국가채무비율이 급증하여 사상 최초로 40%에 육박
 - 국가채무/GDP: 2017 36.0% → 2018 35.9% → 2019 38.1% → 2020(본예산) 39.8%

■ (코로나19 이후) 감염병 확산억제 & 경제 악영향 축소 위한 재정확대로 건전성 무너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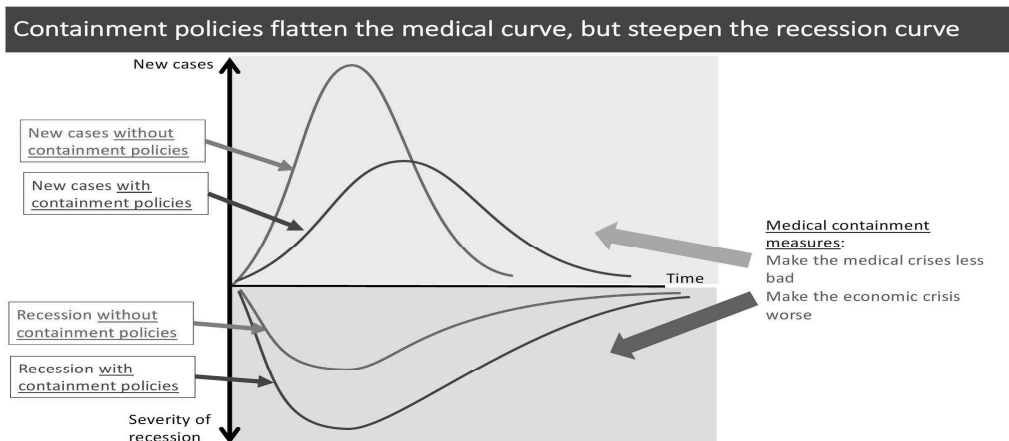
- IMF 4월 전망에서 우리나라 성장률 하향 조정폭이 전 세계보다 작은 것(3.4%p=2.2%→▲1.2% vs 6.4%p=3.3%→▲3.0%)은 우리나라의 확산억제 정책의 성공 효과가 과도하게 반영된 결과
 - 정부는 6월 1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2.3%p(2.4%→0.1%)만 하향 조정
 - 향후 세계경기 침체는 더 악화되면 추가 하향 전망(IMF 4월 ▲3.0%→World Bank 6월 ▲5.2%)
 - 1인당 GDP 3만 달러는 선진국 진입의 갈림길인데 금년에 이를 하회할 전망
 - 2018 3만 3,346달러 → 2019 3만 2,047달러 → 2020 3만 달러 미만

- 3차례의 추경 편성(11.7 + 12.2 + 35.3 = 59.2조원)으로 재정적자 및 국가채무가 급증할 전망
 - 재정적자/GDP: 본예산 3.5% → 1차추경 4.1% → 2차추경 4.5% → 3차추경 5.8%
 - * 종전 최고기록은 1998년 4.6%
 - 국가채무/GDP: 39.8% → 41.2% → 41.4% → 43.5%
 - * 2019년 본예산(740.8조원) 대비 99.4조원 증가

- 우리 경제에 시급한 과제는 다시 지속성장을 위해 경제 체질을 변화시켜야 함
 - 재정은 만능도·화수분도 아니므로 확장적 재정정책과 함께 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통해 민간부문의 자생적 성장동력 회복과 지속적 성장기반 구축 등 성과를 창출해 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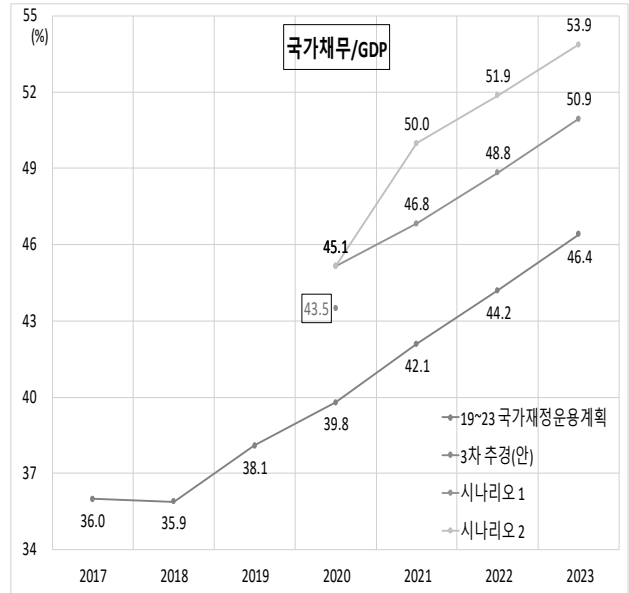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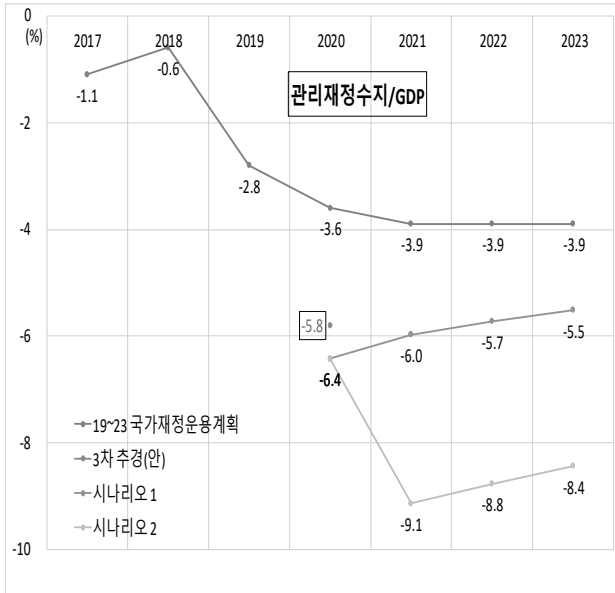
■ (향후 전망) 경제침체 가속화 및 재정건전성 악화 문제가 더 심각해질 전망

- 하반기도 성장률 추가 하락으로 조세 등 수입 감소 & 추가 재정확대 가능성으로 더 악화
 - 경상성장률이 +0.1% → ▲1.2%로 하락시 국세수입만 4조원 이상 추가 감소할 전망
 - 1~3차 추경에 포함된 예산 사업의 거의 대부분은 재난지원에 치중
- ※ 추경호 의원실의 추정(5월 11일)에 따르면 금년말 국가채무/GDP 비율이 46.5%에 달할 전망
 - 국세수입 결손 22~30조원 + 30조원의 3차 추경 + 경상성장률의 하락
- ※ 사회적 거리두기 등 감염병 확산억제 정책으로 인해 경기침체는 더 심화되고 더 오래 지속



- 더군다나 전 국민 고용보험 적용, 기본소득 도입 등 최근 도입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복지제도 확대가 실현될 경우 국가재정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
 - 전 국민 고용보험 적용을 위해서는 최소 연간 3조원 이상 재정 투입 필요
 - 기본소득으로 전 국민에 월 10만원씩(연 120만원) 지급하려면 연간 62.4조원 소요

※ 시나리오 1 & 2 = 1~3차 추경 + 세입감소 + 전 국민 고용보험 적용 + 기본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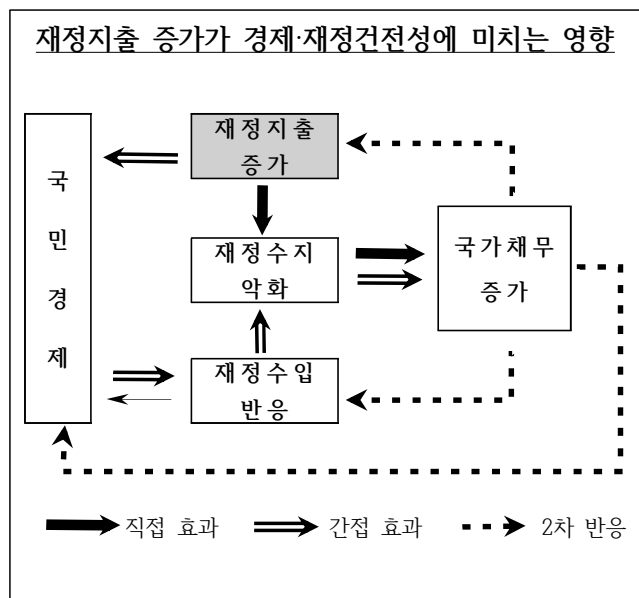


■ 과연 재정위기로 이어질까?

- 재정지출 급증은 즉각적인 재정수지 악화 & 국가채무 증가 초래

- 재정지출 급증이 경제성장률 상승 등 국민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면
 - 재정수입·재정수지의 개선, 국가채무 축소라는 간접효과 가능
 - 추가 재정책대 필요성 감소 + 지출감축 & 수입증대 정책 가능

- 그러나 급증한 재정지출이 긍정적인 성과를 창출해 내지 못한다면
 - 이런 간접효과를 기대 못하고
 - 추가 재정책대 + 재정수입 감소로 국가재정-국민경제 악순환
 → 재정위기 초래



- 아직까지 최근 재정책대의 효과는 미미한 수준
 - 2020년 성장률 제고 효과(NABO): 1차 추경 0.154~0.166%p + 2차 추경 0.097~0.114%p

III. 재정건전성,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

■ 과거 우리나라는 건전한 국가재정이 경제위기마다 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담당했었고
악화된 재정건전성을 회복시키는 데는 여야가 따로 없었음

○ 1997년말 발발한 외환위기

- 1998~1999년 중 총 4차례·16조원의 추경 편성으로 이후 10년 간 국가채무비율 20%p 증가
- 2002년 국회심의를 거쳐 당시 회수불가로 추정된 69조원에 대한 '공적자금 상환대책' 마련
* 금융권 20조 + 나머지 49조원은 국채로 전환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 글로벌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감세와 지출확대로 이후 6년간 국가채무비율 6%p 증가
- 경제위기 극복 후 2010회계연도 총지출 증가율을 급격히 낮춰 경제위기가 없었을 경우의 총지출 수준으로 복귀시킴
* 총지출 증가율: 2008 8.5%, 2009 10.6% → 2010 2.9% → 2011 5.6%

○ 그러나 이번 재정악화 규모는 외환위기보다 큰 연 2~3%p(2019~2023년 5년간 국가채무비율 10~18%p 증가)에 달할 전망이지만 건전성 회복을 위한 정책적 의지 희박

- 우리경제의 단점을 커버해주고 있는 건전한 국가재정을 너무 허망하게 잃어버리는 셈
* 2012 & 2015~2016 국가신용등급 상향(S&P AA, Moody's Aa2) 이유 사라져 하향조정 가능!

■ 재정위기 vs 경제-재정 선순환 여부 재정건전성 회복 및 정책성과 창출이 좌우

- 과거 경제위기에서의 정책 프레임 = 경제구조 개혁 + 재정확대 + 위기 후 건전성 회복
 - IMF 경제위기 = 부실채권 정리 & 기업·금융·공공·노동 4대 부문 개혁 + 재정확대
+ 3~4년 후 공적자금 상환대책 마련
 - 글로벌 금융위기 = 규제개혁, 저탄소·녹색성장, G-20 정상회의 개최·통화스왑·FTA 등 경제외교
+ 3T(Timely, Targeted, Temporary) 원칙으로 재정확대 + 1~2년 후 위기 전 지출 추세로 복귀
- 금번 위기 = 한국판 뉴딜(디지털 뉴딜+그린 뉴딜)? + 재정확대 + 건전성 회복 정책의지 없음
- ※ 1990년대 초 통일 휴유증 앓았던 독일과 금융위기를 겪었던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
 - * 아젠다 2020, 하르츠 개혁 등
 - * 복지개혁 & 재정개혁 등
 vs 비슷한 시기 부동산·주가 버블이 붕괴되었던 일본이나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의 그리스
 - * 1990년 이후 총 25차례의 단기 미봉책의 경기부양책
 - * 구제금융에 의한 외부강제 개혁
- 야당이지만 미래통합당이 자체적으로 이번 경제-재정위기를 극복하는 것 뿐만아니라 신성장&사회통합 전략까지 제시하는 큰 그림을 그려야!

■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재정총량 관리 강화

- 재정건전성 중요성을 인식하고 무너진 재정규율을 다시 세워야!
 - 느슨해진 거문고의 줄을 팽팽하게 고쳐 매는 것처럼 재정을 '경장(更張)'해야
 - ① 중단된 「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을 다시 추진해 재정적자와 국가채무에 대한 한도를 설정하는 '재정준칙(fiscal rules)'을 도입해야(최근 감사원도 지적)
 - ② 재정지출 증가나 세입감소를 초래하는 법안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재원조달 법안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페이고(PAYGO) 원칙'을 법제화하여 엄격하게 집행해야(미국을 본받아)
 - ③ 국가재정운용계획, top-down 예산 제도, 재정성과관리제도 등 행정부의 재정운용 체계에 상응하도록 국회의 예산심의 체계를 재정비해야(10년 이상 담보 상태)
- 국가재정을 건전하게 만드는데 왕도는 없다! = 세출 억제 + 세입 확충
 - ④ 재정지출 증가속도를 경상성장률 또는 재정수입 증가율 수준으로 제어(2005~2017년 중 연평균 총지출 증가율은 5.6%로 경상성장률과 동일)
 - ⑤ 복지정책의 가성비를 높이는 맞춤형 복지 강화(복지 이외 재정규모는 OECD국가 평균 수준이므로 결국 복지지출의 증가속도 제어만이 조세부담의 지나친 증가를 막는 유일한 길)
 - ⑥ 국제적 조세정책 큰 흐름인 '넓은 세원, 낮은 세율'에 따라 세입을 확충하는 노력도 병행(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 있도록 보다 넓은 대상에 대해 완만하지만 지속적인 증세 필요)

■ 정책성과 창출을 위한 개별 예산사업 관리 강화

-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으로 가능한 한 국민부담을 크게 늘리지 않고 국가재정을 운용해야!
 - ⑦ 보다 과감한 지출구조조정을 위해 ‘전략적 지출검토’(strategic spending review)를 도입해야
(여러 부처에 흩어져 제대로 정책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각종 유사·중복 예산사업들을 통·폐합하고, 정책 우선순위에 입각해 과감하게 기존 예산사업들을 근본적으로 재검토)
 - ⑧ 예산사업 효과성 높이기 위해 PDCA(Plan-Do-Check-Action) 정책 사이클별 재정관리 강화
 - 행정부: 사전검토, 예산심사, 사업관리, 결산심사, 사후평가 등 지출관리 강화(최근 지출 급증 과정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제도 완화 등 개별 예산사업에 대한 관리가 느슨해짐)
 - 입법부: 예산심사·결산심사 강화, 국정감사·현안조사 등 활동결과가 입법과 예·결산 심사에 보다 체계적으로 반영되도록 제도화
- 개별 예산사업의 성과관리도 강화해야!
 - ⑨ 형식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 등 재정사업 성과관리 강화(최근 건전성이 훼손될 정도로 지출이 계속 급증하는데도 경제성장, 일자리, 소득재분배, 국민 삶의 질, 사회통합 등 재정정책의 성과가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첨부한 다음 내용을 꼭 읽어 보시길 바람

- 재경회·예우회·조세재정연구원의 ‘건전재정의 길 12대 원칙’
- 건전재정포럼의 호소문 ‘2020년 정부 예산편성 지침 수립에 즈음하여’

재경회·예우회·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 발간한 「한국의 재정 60년: 건전재정의 길」(2011)의 제안

※ 재경회: 한국 경제발전의 중추역할을 한 경제기획원과 재무부, 기획예산처에서 봉직한 전직 경제관료들 모임
예우회: 옛 경제기획원, 재무부, 재정경제원, 기획예산처, 현 기획재정부의 예산·재정분야 공무원들 모임

건전재정의 길 12대 원칙

한국재정 60년의 역사를 정리하면서 여기에 참여한 편집위원들은 건전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건전재정의 길 12대 원칙'을 제안한다.

1. **예산담당자의 자세** - 예산담당자는 재정이 국가관리의 최후 보루라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알뜰한 살림꾼의 자세로 재정 규율을 세워나가며 열정과 헌신을 가져야 한다.
2. **국가부채 관리** - 국가부채의 증가속도가 빠른 상황 하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중앙정부·지방정부·공기업 등 기관별로 정확히 부채규모를 파악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3. **세출구조조정** - SOC 투자비·행정경비 등 재량적 지출을 2년 이내에 10% 절감하여 예산의 낭비와 비효율을 최소화해야 한다.
4. **칸막이 예산구조 재점검** - SOC·농업·교육 등 예산구조의 칸막이를 고령화·통일 등 재정수요의 변화에 대비하여 재점검해야 한다. 특정분야의 지원규모를 GDP나 재정의 일정비율에 연계하는 방식의 재원배분은 지양해야 한다.
5. **엄격한 타당성 조사 시행** - 대규모 재원이 수반되는 시책을 추진하거나 제도를 신설하는 경우, 소요비용 및 효과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국민적 합의를 얻은 후 추진해야 한다. 대형사업의 타당성 조사 기관에 대해서는 조사결과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한다.
6. **세입기반 확충** - 고령화 및 점증하는 복지욕구에 대비하기 위하여 조세부담률을 점진적으로 높여 나가야 한다. 소득과 재산 관련 세제의 개편과 함께 조세감면의 단계적 축소, 탈루 소득·체납 세금의 징세 노력 등을 강화해야 한다.
7. **복지정책 방향** - 향후 복지제도는 국민부담·국가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복지 프로그램 5개년 청사진'을 수립하고 재원 대책과 함께 검증절차를 거쳐야 한다. 복지전달체계를 전면 개편하여 누수·낭비·중복 등 불합리한 복지예산을 최소화해야 한다.
8. **국민연금 등 개혁** - 급격한 고령화 등으로 지출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재정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특히 의료비 증가를 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건강보험재정의 잠재적 적자요인에 대처해야 한다.
9. **지방자치단체 재정관리 강화** - 지방자치단체의 전시성 국제회이나 행사에 대한 철저한 사전심사와 함께 대형 신규사업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를 강화해야 한다. 지방재정혁신·부채관리 등을 위해 전면적인 경영진단을 실시하고 재정이 파탄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회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10. **공기업 개혁** - 개별 공기업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공기업 개혁을 단기적으로 접근하면 개혁에 대한 내성만 키우게 되므로 종합적·체계적 중장기 전략을 세우고 시스템화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11. **재원대책 마련 후 대형 신규사업 추진** - 구체적 재원 대책이 없는 새로운 법이나 제도는 원칙적으로 도입해서는 안 된다. 복지 등 국가의 의무적 지출을 유발하는 새로운 법이나 제도를 도입할 경우 반드시 구체적 재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비타당성 조사가 없는 신규 대형사업에 대한 예산반영을 제한해야 한다.
12. **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 - 국가부채 관리 강화, 국가부채 한도 설정, 재원 대책의 의무화 등 건전재정의 길을 제도화하기 위해 '재정건전화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국가경영전략연구원 건전재정포럼의 호소문(2019.03.20)

※ 건전재정포럼: 2012년 9월에 정치권에서 확산되고 있는 복지 포퓰리즘에 맞서기 위해 국가경영전략연구원이 전직 관료, 전현직 언론인 및 학자 등 100여 명을 주축으로 결성

2020년 정부 예산편성 지침 수립에 즈음하여

1. 2020년 예산 편성은 향후 국가 재정운영 방향을 가늠할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연이어 진행될 총선과 대선 국면에서 그동안 소중하게 가꾸어 온 재정 규율이 쉽게 허물어질까 봐 심히 우려되는 상황임.
2. 국민들은 자기가 낸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길 바라고, 또한 필요한 곳이라도 헤프게 사용되지 않기를 기대하고 있음. 국민적 숙려 과정과 재원의 면밀한 추계가 부족한 무리한 공약 집행에 집착하지 않아야 하며, 목표의 명확성과 상호 유기성이 취약한 공약은 재검토가 바람직함.
3. 복지제도는 근래 빠르게 확장되었으며, 특히 이 정부 하에서 의료, 교육, 연금 등 여러 분야에서 큰 신장 노력이 이루어졌으므로 선진국에 비교해서도 제도 신설의 필요성은 더 이상 찾기 어려움. 정책 초점을 복지 제도 확대보다 국가의 도움이 절실한 국민에게 제대로 혜택이 돌아가도록 내실화·체계화에 두어야 함. 또한 복지사업은 생산적 복지, 자조 노력 전제, 지속가능성 기준으로 관리해 나가야 할 것임. 아울러 무질서한 지방의 복지 프로그램 남발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함.
4. 엄청난 예산(54조원)이 투입되었으나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일자리 예산을 전면 재정비하여, 소모성 지출보다 직업훈련 등 환경 변화에 대한 국민들의 적응 능력을 배양하는 데 집중 투입할 것을 촉구함. 특히 향후 5년간 소요되는 직업 직능별 인력 수요에 맞추어 훈련 기관의 대폭적인 정비 및 보강이 필요함.
5. 공무원 증원 등 공공부문 인력 정책은 그 인력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얼마나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부족한 지에 대한 근거에 기반해서 판단해야 하는 국가운영의 기본 틀임. 단순 실업 대책으로 이를 활용함은 매우 경계하고 지양해야 함.
6. 최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의 발표로 토건 포퓰리즘 난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바, 대규모 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경제성 검토를 강화하여 선거용 국책사업 확대라는 의혹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음. 반면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여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필요한 지출에 대해서는 특단의 우선순위를 부여하되 실효성이 낮은 사업은 과감히 정리되어야 할 것임.
7. 지방재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이나 국고보조금 매칭비율에 대한 논란이 거센 가운데, 국민의 세금을 둘러싼 중앙과 지방간의 소모적인 논쟁이 지속되고 있음. 자율과 책임에 걸맞은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지방간의 기능조정 및 재정분담의 종합적 원칙을 제시할 것을 촉구함.
8. 세계에서 가장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국가부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도 장기국가재정 추계가 없어 이정표 없이 재정정책이 설계되고 있는 실정임. 현재 운영되고 있는 5년 단위의 국가재정운영계획을 실효성 있게 보완함과 아울러 장기적 시계의 재정상황을 주기적으로 국민들에게 공표하고 정책 수립의 근거자료로 제시하기 바람.
9. 우리나라와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하에서는 재정 건전성은 대단히 소중한 가치임. 어려운 여건 하에서 헌신하고 있는 재정담당자들은 재정이 국가운영의 최후 보루라는 소명의식과 국민의 세금을 지키는 파수꾼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재정규율(fiscal discipline)을 철저히 지켜, 세계가 공인하는 60년 건전재정의 전통을 살려 나가야 함.

| 발제2 |

한국의 재정승수 추정과 시사점

-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한국의 재정승수 추정과 시사점

조경엽

KERI
2020.6



내용



- 서론
- 재정지출과 경제성장률
- 역 케인지언 현상의 원인과 결과
- 올바른 재정정책 방향

재정위기 가능성 고조

● 국가부도 위기 국가의 공통점

❖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그리스 등 국가부도위기의 공통점

- 경제의 기초체력 약화,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와 국민소득 감소에 따른 민간부채 급증
- 세입기반은 취약 하지만 재정은 방만하게 운용
 - ✓ 인기영합적인 복지지출과 국책사업 폭증
-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국채 발행, 부채에 시달리는 가계와 기업은 사줄 여유 부족
- 외채에 의존한 국가채무가 급속히 증가함
- 작은 충격에도 자금유출 확대
- 높은 이자율에도 불구하고 국채발행 실패
- 화폐발행을 통한 국채발행
- 하이퍼 인플레이션과 환율급등

⇒ 국가부도

재정만능주의, 저성장 고착화

● 경제기초체력 약화

❖ 소득주도 성장, 반기업·친노조 정책, 갈라파고스적인 높은 규제, 법인세 인상 등 반시장정책

- 2019년 실질성장률 2%, 명목성장률 1.4% (OECD 국가 중 꼴지에서 3번째)
- 탈 한국현상 가시화: 해외직접투자 845억달러로 역대 최대
- 수출, 코로나 이전에도 18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
- 99개월만에 처음으로 경상수지 적자 기록

❖ 정책 부작용을 재정으로 해결하려는 재정만능주의 만연

- 국가채무, 627조원 (2016년) → 758조원(2019년) 131조원 증가
- 올해만 111조원 증가, 국가채무비율 46.5%(추경호 의원)
- 신용평가사 피치, 국가채무 46% 신용등급 하락 압력

❖ 국가부채 2019년 GDP대비 238%(BIS), 신용 주의 단계로 추락

- 가계부채는 1,827조원, 비금융 기업부채 1954조원, 정부부채 758조원
- 주요 43개국 중 4번째로 빠르게 증가
- 신용갭, 7%까지 벌어져 국가신용이 주의단계로 하락



자료: 매일경제, 2020.5.29

코로나 경제위기, 재정으로 극복 가능한가?

● 제도개혁과 구조조정 없는 재정책대, 국가채무 급증과 장기 저성장의 원인

❖ 정책실패를 코로나 탓으로 돌리는 현 정부

- 3차 추경 1972년 이후 처음, 규모 59.2조원 역대 최대
- 공공일자리 창출: 공공부문 일자리 100개 증가 → 민간일자리 150개 감소 (Algan et al, 2002)
- 한국판 뉴딜: 기존 정책 반복, 한달 만에 급조된 토목사업, 경제성 없는 지역사업(45조원 제한)
-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비대면산업 육성 : 규제강화 하는 정부

❖ 뉴딜정책으로 대공황 극복?

- 다리 7만 7천개, 건물 11만 6천개 건설
- 국민을 위하는 명목으로 배우 고용 & 무료공연
- 공공건물 새들 쫓고 바람에 날리는 풀 더미 줍는 사람 고용
- 반시장 정책과 세금인상
 - 스무트-홀리 관세법 : 무역전쟁 유발
 - 국가산업진흥법 재정 : 생산비 증가 경제회복 지연
 - ✓ 최저임금 인상과 최대노동시간(주 40시간)
 - ✓ 노동시장 규제, 생산설비 & 가동시간&생산량 제한
-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인상
- 생산적인 곳에서 세금을 걷어 비생산적인 곳으로 이전

우후죽순 쏟아지는 한국형 뉴딜 방안

비대면 디지털 인프라 SOC 디지털화 경제 중대본에서 공식 논의	정원형 뉴딜 SOC사업(28.3조3000억원)에 디지털 집중	울산형 뉴딜 휴먼 뉴딜 등 73314억원	부산형 뉴딜 수산 관련 뉴딜에 125900억원 국비지원 요구
그린 뉴딜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등 합동 계획 마련	한반도 뉴딜 철도안결 사업 등 238530억원	건설 뉴딜 건설협회 투자 5조원 요구	어촌 뉴딜 어촌 뉴딜 대상지 50곳에 7500억원 지원

자료: 한국경제, 2020.5.18

코로나 경제위기, 재정으로 극복 가능한가?

● 제도개혁과 구조조정 없는 재정책대, 국가채무 급증과 장기 저성장의 원인

❖ 일본의 장기 저성장, 구조조정 실패가 원인

- 풀 크루그먼: 유동성함정 → 통화정책만으로 경기 회복 불가능 & 대폭적인 재정지출 제언
 - ✓ 1992년~2011년: 20년에 걸쳐 339.7조엔(1년 예산의 3.5배)에 달하는 경기부양 정책 실시
 - ✓ 아무도 다니지 않는 산골에 도로를 건설하고 국민들에게 상품권을 공짜로 제공
- 낮은 이자율과 재정지원 → 구조조정 지연 → 글로벌 성장동력으로 떠오르던 반도체 산업에 대한 투자 실기
- 재정이 투입될 때마다 경기가 반짝 살아나다 다시 가라앉는 일이 반복
- 국가채무는 세계 최고수준으로 치솟고 저성장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음

❖ 현재의 한국경제, 대공황 당시의 미국과 장기침체에 진입한 일본과 유사

-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현금성 복지 확대, 법인세 & 보유세인상, 규제강화 ↔ 국가산업진흥법
- 일자리 지원 정책,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강화, 금리인하로 한계기업 급증 & 구조조정지연
- 4차산업기술 경쟁력 약화 ↔ 일본의 장기저성장

❖ 재정지출 확대로 코로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을 견인할 수 있나?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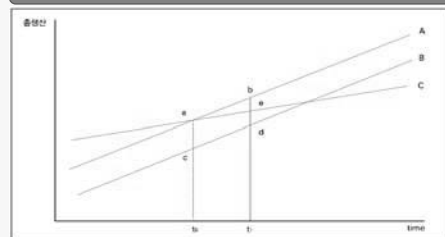
- 서론
- 재정지출과 경제성장률
- 역 케인지언 현상의 원인과 결과
- 올바른 재정정책 방향

재정지출의 성공과 실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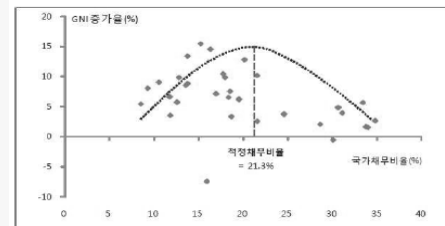
● 재정의 성장 기여 조건

- ❖ 경제성장을 결정하는 요소
 - ❖ 노동, 물적·인적자본, 기업가 정신
- ❖ 재정지출이 성장을 견인하는 경우
 - 재산권 보호, 교육 및 기초과학에 대한 정부투자로 물적·인적자본이 늘어나고 기술혁신이 일어난다면 재정지출도 경제성장에 기여
- ❖ 투입(재정)대비 산출(성장)을 극대화하는 재정지출(국가채무) 수준 존재
 - 비효율적인 세입구조 → 재정의 한계비용 증가
 - 비효율적인 분야 지출 증가 → 편익 감소

재정지출의 성장효과와 규모 효과



[그림 5-3] 최적 국가채무 비율의 추정: 조성원(2013)



주: 1981~2012년 실질 GNI 증가율과 국가채무비율 자료. 출처: 조성원(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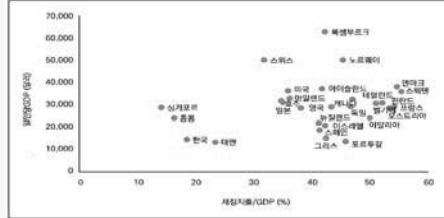
재정지출의 성공과 실패

● 재정의 비용과 편익

❖ 정치적 논리가 지배하는 국가일수록 재정이 적정규모를 초과

- 스위스: 지난 40년간 GDP 대비 재정지출 비중이 30% 수준이지만 일인당 국민소득은 5만 달러 상회
- 싱가포르: 40년 평균 재정지출 비중 14%, 일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등은 GDP의 40~50%에 달하는 재정을 쓰고도 일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 내외에 기록
- 그리스, 80년대 국가채무 비율이 평균 41%에서 2010년대 174%로 증가했으나 성장률은 -2%로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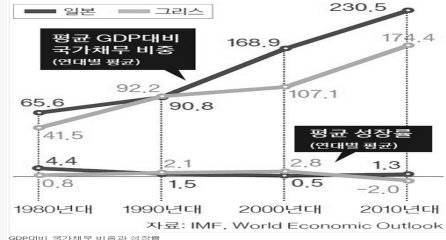
일인당 국민소득과 재정지출 비중 관계(1980~2019년 평균)



자료: IMF의 GFS 자료

GDP대비 국가채무 비중과 성장률

※1980년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일본 48.8%, 그리스 22.6%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자료: 중앙일보, "조경엽의 이코노믹스" 2020.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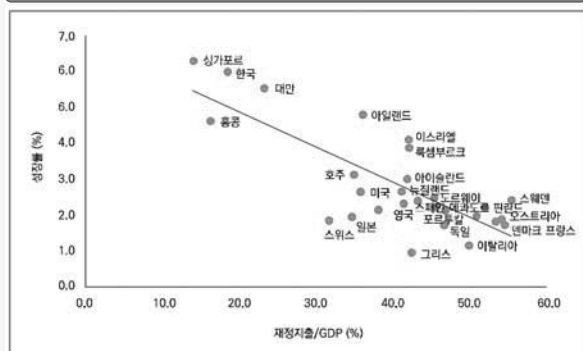
재정지출의 성공과 실패

● 투입(재정)과 산출(성장)과의 관계

❖ 지나 40년 선진국들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임

- GDP 대비 재정지출 비중이 20% 내외인 한국, 타이완, 홍콩 등은 높은 성장률을 기록
- 재정지출비중이 50% 내외인 북유럽과 서남부 유럽 국가들의 성장률은 2% 내외를 기록

일인당 국민소득과 재정지출 비중 관계(1980~2019년 평균)



자료: IMF의 GFS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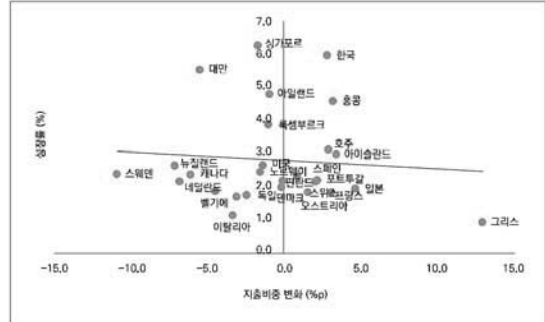
자료: 조경엽(2020), "재원조달을 포함한 재정승수 효과"

재정지출의 성공과 실패

● 투입(재정)과 산출(성장)과의 관계

- ❖ 지난 40년간 연평균 5% 이상 성장한 국가 중,
 - ❖ 재정지출 비중이 증가한 국가: 한국, 홍콩
 - ❖ 재정지출 비중이 감소한 국가: 싱가포르, 대만, 아일랜드
- ❖ 지난 40년간 연평균 2% 내외 국가 중,
 - 재정지출 비중이 증가한 국가: 스페인, 포르투갈, 일본
 - 재정지출 비중이 감소한 국가: 스웨덴, 뉴질랜드, 캐나다, 네덜란드
 - 재정지출이 감소한 국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달성

〈그림 4〉 정부 지출비중 변화(80-99년 평균과 00-19년 평균 차이)와 성장률(1980-2019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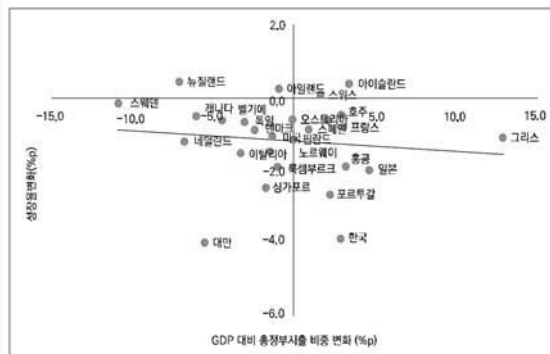
자료: 조경엽(2020), "재원조달을 포함한 재정승수 효과"

재정지출의 성공과 실패

● 투입(재정)과 산출(성장)과의 관계

- ❖ 재정지출 비중이 증가 & 성장률이 증가한 국가
 - ❖ 스위스, 아이슬란드
- ❖ 재정지출 비중이 감소 & 성장률이 증가한 국가
 - 뉴질랜드, 아일랜드
- ❖ 한국, 재정지출 비중 3.7%p 증가 & 성장률 3.9%p 하락
- ❖ 대만, 재정지출 4.6%p 감소 & 성장률 4%p 하락
- ❖ 재정지출 비중 하락한 국가의 성장률 감소폭이 재정지출 비중이 증가한 국가의 성장률 하락폭 보다 낮음

〈그림 5〉 정부 지출비중 변화와 성장률 변화(80-99년 평균과 00-19년 평균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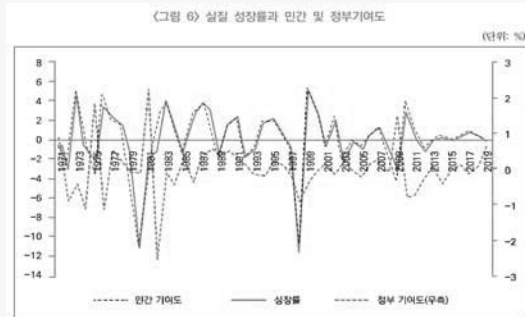
자료: IMF의 GFS 자료

자료: 조경엽(2020), "재원조달을 포함한 재정승수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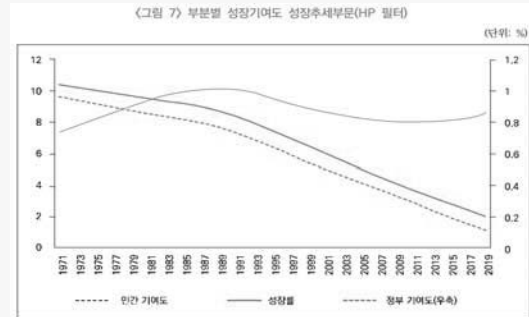
한국의 재정지출과 경제성장

● 정부의 성장기여도 실질 성장률과 역행

- ❖ 정부와 민간은 희소한 자원을 두고 경쟁, 정부의 역할이 커질수록 민간의 경제활동을 구축
- ❖ 우리나라는 비효율적인 세목의 지우이 높아 재정지출의 한계비용 높음
- ❖ 복지 등 소비성 지출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재정지출의 한계편익도 감소하는 추세



자료: 조경업(2020), "재원조달을 포함한 재정승수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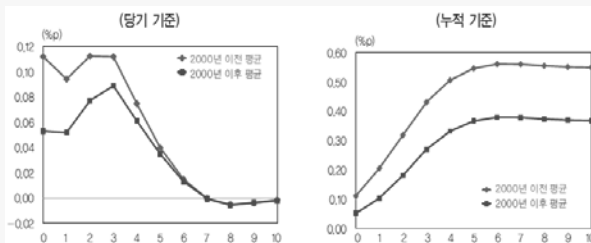


자료: 조경업(2020), "재원조달을 포함한 재정승수 효과"

마이너스로 가는 재정지출 승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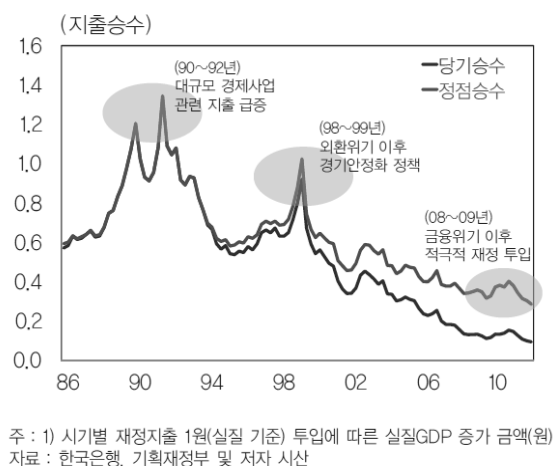
● 우리나라, 재정승수 하락추세 & 유효성 상실

- ❖ 재정승수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
- ❖ 재정정책 유의하지 않거나 재정승수가 작고 긴 시차
— 김태봉·허석(2017)
- ❖ 재정지출 승수가 양으로 추정되는 이유는 재정지출의 비용측면을 무시 한 결과



주: 1) 가로축은 충격 발생 후 경과시점(분기), 세로축은 양(+)의 지출충격에 대한 GDP 성장률 변화분의 1985.4/4~1999.4/4분기 및 2000.1/4~2011.4/4분기 중 평균을 나타냄
자료: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및 저자 시산

자료: 최진호·손민규(2013)



주: 1) 시기별 재정지출 1원(실질 기준) 투입에 따른 실질GDP 증가 금액(원)
자료: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및 저자 시산

자료: 최진호·손민규(2013)

내용



- 서론
- 재정지출과 경제성장률
- 역 케인지언 현상의 원인과 결과
- 올바른 재정정책 방향

역 케인즈언 현상의 원인

● 케인지언 정책의 한계

❖ 케인지언의 유효수요 이론의 작동원리

-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유휴 자원과 생산요소가 존재
 - ✓ 독점적 경쟁시장
 - ✓ 임금과 재화의 가격의 경직성
 - ✓ 경제주체의 근시안적 예측능력
- 경기침체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
 - ✓ 복지 및 공공투자나, 실질임금 인상, 이자율 인하 등 확장적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 케인지언 정책의 문제점

- 케인지언 사고에는 재정지출의 기회비용에 대한 개념 부재
- 역동성을 무시한 근시안적 해법에 치중
- 소비는 미덕이고 저축은 악덕이라는 오류
 - ↔ 저축은 기업이 더 많은 생산을 하기 위한 자원의 창고이고 미래소비의 원천
 - ↔ 빚에 허덕이는 사람에게 빚을 더 내서 소비하면 더 잘 살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
- 전쟁과 같은 파괴적 행위도 경제에 도움된다는 오류에 빠지기 쉬움

❖ 오스트리안 학파의 경고

- 소비 진작을 정부개입과 통화팽창 → 시간선호에 대한 착각 → 과잉·과오 투자 및 소비 → 버블 형성과 붕괴 → 경기침체
- 경기침체는 과잉·과오투자를 시정할 기회 → 정부개입 → 저성장

역 케인즈언 현상의 원인

● 역 케인즈언의 발생 원인

- ❖ 정책신뢰 하락
 - 국가개입주의 확산 → 재산권 침해, 근로의욕 상실, 기업가 정신 추락, 경제의 역동성 하락으로 내수 위축
 - 정책불확실 증가 → 소비심리와 투자심리를 위축
- ❖ 국가채무 급증에 따른 구축효과
 - 국가채무 증가 → 국채금리 상승 → 시장금리 & 환율상승 → 투자 감소와 자본유출 확대
 - 국가채무 증가 → 미래의 세 부담 증가 & 긴축재정에 대한 기대(expectation) 변화 → 예비적 동기의 저축 증가 → 소비 감소
- ❖ 비효율적 지출구조
 - 경제성 없는 국책사업 확대 → 민간의 투자 구축
 - 현금성 복지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확대 → 민간의 소비와 일자리 구축
- ❖ 시장 왜곡적인 세입구조
 - 법인세, 재산세 등 비효율성이 큰 세목의 비중 증가 → 투자와 자본유출 확대
- ❖ 높은 수입비중
 - 재정지출의 상당 부분이 수입재화 구매
 - 수입재화 가격 상승 → 생산비용 상승 → 수출경쟁력 하락
- ❖ 구조조정 지연
 - 한계기업 증가 → 신규 투자 위축
- ❖ 높은 거래비용 유발
 - 예산 심의 기능 취약 → 포크베릴 예산 증가
 - 후진적 재정 인프라 → 관련 공무원 증가

역 케인즈언 결과

● 재정지출의 장기 성장탄력성 -0.034 ~ -0.073

- ❖ 조경엽(2020), 선진 28개국의 1980년~2019년 자료를 이용한 계량분석
 - 자원조달 방법을 명시적으로 반영
 - 재정적자를 통해 재원을 조달할 경우,
 - ✓ 장기 성장 탄력성 : -0.034 ~ 0.073
 - ✓ 단기 성장 탄력성 : 0.016
 - ✓ 재정적자를 통해 재원을 조달할 경우 상당한 시차를 두고 세금이 인상되기 때문에 단기적인 재정승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지만 미래 세 부담 증가로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부정적으로 작용
 - 증세를 통해 재원을 조달할 경우,
 - ✓ 장기 성장 탄력성 : 장기 탄력성이 마이너스로 나타나지만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
 - ✓ 단기 성장탄력성 : -0.012
 - ✓ 증세는 재정적자와 달리 재정지출과 자원조달과의 시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장기 성장률에 미치는 부작용은 크지 않지만 단기적인 마이너스 효과가 강하게 나타남

역 케인즈언 결과

● 재정지출의 장기 성장탄력성 -0.034 ~ -0.073

〈표〉 재정지출의 장단기 효과

재원조달 방법		재정적자			중세			
		(1)	(2)	(3)	(4)	(5)	(6)	
장기 효과	재정확대	-0.034*** (0.009)	-0.047*** (0.008)	-0.073*** (0.010)	-0.005 (0.010)	-0.010 (0.007)	-0.012 (0.008)	
	감세	0.029*** (0.011)	0.037*** (0.009)	0.062*** (0.012)				
	재정적자 축소				0.029*** (0.011)	0.037*** (0.009)	0.062*** (0.012)	
조정속도		-0.166*** (0.018)	-0.151*** (0.022)	-0.122*** (0.018)	-0.103*** (0.018)	-0.151*** (0.022)	-0.122*** (0.018)	
단기 효과	재정지출 /GDP	D1	0.002 (0.003)	0.016*** (0.005)	0.016*** (0.005)	-0.012** (0.006)	-0.008 (0.008)	-0.011*** (0.008)
		D2	-0.006*** (0.002)	-0.023*** (0.004)	-0.022*** (0.004)	0.007** (0.003)	0.009 (0.010)	0.011 (0.009)
		D3		0.008*** (0.002)	0.008*** (0.002)		-0.003 (0.004)	-0.004 (0.005)
	조세수입 /GDP	D1	-0.015*** (0.005)	-0.024*** (0.007)	-0.027*** (0.006)			
		D2	0.013*** (0.003)	0.032*** (0.009)	0.033*** (0.009)			
		D3		-0.012*** (0.004)	-0.012*** (0.004)			
	재정수지 /GDP	D1				-0.015*** (0.005)	-0.024*** (0.007)	-0.027*** (0.006)
		D2				0.013*** (0.003)	0.031*** (0.009)	0.033*** (0.009)
		D3					-0.012*** (0.004)	-0.012*** (0.004)
	control	고용증가율	1.629*** (0.392)	1.418*** (0.328)	1.307*** (0.321)	1.629*** (0.392)	1.418*** (0.328)	1.307*** (0.321)
		투자/GDP	0.093* (0.051)	0.044 (0.044)		0.092 * (0.051)	0.096 (0.044)	

주: ()는 standard error를 의미하며, *p(0.10), **p(0.05), ***p(0.01)

내용



- 서론
- 재정지출과 경제성장률
- 역 케인즈언 현상의 원인과 결과
- 올바른 재정정책 방향

올바른 재정정책 방향

● 재정만능주의에 벗어나 경제의 기초체력 강화에 역점

❖ 잘 못된 정책을 수정하여 불필요한 재정수요 차단

- 소득주도성장정책 중단
- 반기업·친노조 정책과 공정경제 정책에 대한 과감한 수정
- 규제개혁을 통해 미래 먹거리 창출

- 저효율·고비용 해소와 국내투자환경 개선 - 성장동력 확충 & 세입기반 강화

❖ 재정건전화법 재정

- 인기영합적인 지출 방지, 재정준칙 도입
 - OECD 국가 중 30개국이 도입
- 국회에 계류 중인 재정건전화법 통과 시급

	1985년	1995년	2015년
도입국가	3	20	30
지출준칙	2	6	25
재정수지준칙	3	19	29
채무준칙	0	16	23

자료: KDI

❖ 예산결사위원회를 예산위원회와 결산위원회 분리

- 정부가 예산안을 90일 전에 국회에 제출 → 국회에서 예산을 심사할 기간이 30일
- 30일 가지고 예산을 꼼꼼히 따지고 제대로 심사하기에는 기간이 너무 짧음
- '쪽지예산·카톡예산'과 같은 행위를 두고 '포크 배럴 예산' 만연
- 미국이나 영국처럼 정부의 예산집행에 대한 감사가 의회에서 상시적으로 진행되고 그 결과가 예산편성과 심의에 반영
- 정부의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의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도록 법을 개정

| 토론1 |

고삐 풀린 국가재정, 이대로 괜찮은가?

- 옥동석 인천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

I. 우리나라에 실효성 있는 재정준칙은 존재하는가?

- 우리나라 국가재정법은 1951년 이래로 재정수지 균형의 재정준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사실상 사문화
 - “국가의 세출은 국채·차입금 외의 세입을 그 재원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국채 또는 차입금으로써 충당할 수 있다.”(국가재정법 제18조)
 - 제18조의 단서조항 ‘부득이한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2004년 이전까지는 재정수지의 개념조차 명확하고도 충분하게 정의되지 않았음.
 - 기획재정부는 2004년부터 도입한 5년 단위의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재정운용의 기본방향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지만 실효성이 거의 없음.
 - 2005년도: “관리재정수지 GDP대비 Δ 1% 수준; 국가채무의 GDP 비율은 30% 수준”
 - 2008년도: “2012년 균형재정을 위해 재정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및 재정수입 증가율 이내에서 관리;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30% 수준에서 탄력적으로 관리”
 - 2013년도: “적자규모 지속 축소하여 2017년 GDP대비 Δ 0.4% 개선; 국가채무 비율 하락세 유지하여 2017년 35%대 수준으로 하향 안정화”
 - 2017년도: “GDP대비 Δ 2% 내외에서 관리; 국가채무비율은 40% 초반 수준에서 관리”
 - 2018년도: “GDP대비 Δ 3% 이내에서 관리; 국가채무는 GDP대비 40% 초반 수준에서 관리”
 - 2019년도: “GDP대비 Δ 3% 중반 수준으로 관리; 국가채무는 GDP대비 40% 초반 수준에서 관리”
- ※ 관리재정수지 전망치는 2023년 Δ 3.9%; 국가채무 전망치는 2023년 46.4%

II. 과연 우리나라 재정은 40년 뒤에도 지속가능한가?

- NABO는 2016년 장기재정전망에서 “국가채무가 GDP 대비 70.6% 수준이 되는 2036년 이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
 - NABO는 2012년부터 현행 법률 및 제도가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서 미래의 재정지표들을 기준선으로 전망하는데, 2016년의 전망에 의하면 2060년 국가채무의 GDP대비 비율은 151.8%임.
 - 국민연금, 사학연금은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적자보전에 대한 정부의 법적 의무가 없기에 기준선 전망에서 제외되는데, 이들의 적자를 국가채무에 모두 반영하면 191.1%에 달함.

<표 1> 국가채무 장기 기준선 전망

(단위: 조원, GDP대비 %)

구 분	2016	2020	2030	2040	2050	2060
기준선 전망	638.1 (39.5)	846.0 (43.6)	1,783.3 (43.6)	3,611.5 (80.1)	6,851.9 (111.0)	12,099.7 (151.8)
사학연금 적자반영	638.1 (39.5)	846.0 (43.6)	1,797.8 (59.0)	3,707.9 (82.2)	7,150.5 (115.8)	12,819.7 (160.8)
국민연금 적자반영	638.1 (39.5)	846.0 (43.6)	1,783.4 (58.5)	3,611.5 (80.1)	7,231.7 (117.1)	14,511.4 (182.0)
연금적자 모두 반영	638.1 (39.5)	846.0 (43.6)	1,797.8 (59.0)	3,707.9 (82.2)	7,530.4 (122.0)	15,231.4 (191.1)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16~2060 NABO 장기 재정전망」.

- 2012년, 2014년, 2016년 세 차례의 NABO 장기재정전망에서 2060년 국가채무 비율은 192.7%, 168.9%, 151.8%로 계속 하락하였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음.
 - 2014년 전망에서는 2012년의 전망치 192.7%가 168.9%로 하락하였는데, 그 이유는 “거시경제 전망 및 전망모형 변경, 최근 제도 변화 및 실적치 반영”에 기인한다고 설명.
 - 2016년 전망에서는 전망치가 151.8%로 하락하였는데, 그 이유는 “공무원 연금개혁 등을 통한 정부의 지출감소 노력으로 총지출 증가율(4.4%)이 2014년 전망의 총지출 증가율(4.7%)보다 감소”했기 때문으로 설명.
- 2018년의 NABO 장기재정전망에서는 최종 전망년도를 2050년으로 축소하였고 또 2050년의 국가채무비율을 111.0%에서 85.6%로 하향 조정하였음.

- 2018년 NABO 장기재정전망은 통계청의 ‘2015~2065년 장래인구추계’ 발표에도 불구하고 최종 전망년도를 15년이 축소된 2050년으로 한정
- 통계청의 ‘2015~2065년 장래인구추계’는 ‘2010~2060년 장래인구추계’보다 인구상황이 더욱 나빠져 경제성장률이 하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채무비율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이유에 대한 설명이 없음.

<표 2> NABO의 국가채무비율 장기재정전망 비교

(단위: 조원, GDP대비 %)

구 분	2016/19	2020	2030	2040	2050	2060
2016년 전망	638.1 (39.5)	846.0 (43.6)	1,783.3 (43.6)	3,611.5 (80.1)	6,851.9 (111.0)	12,099.7 (151.8)
2018년 전망	718.1 (38.4)	759.1 (39.5)	1,240.9 (50.5)	1,930.8 (65.6)	2,863.8 (85.6)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16~2060 NABO 장기 재정전망」; 「2019~2050 NABO 장기 재정전망」

- 기획재정부는 2015년 12월에 최초의 공식적인 장기재정전망을 발표하였는데,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재정여건이 매우 어렵다고 총론적으로 평가함.

[상자 1] 기획재정부의 장기재정전망 평가 총론

- (총론) 잠재성장률 둔화로 재정수입 증가세 약화, 복지제도 성숙,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관련 지출이 크게 증가하는 등 미래 재정건전성의 압박요인이 있어 장기 재정여건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 일반재정부문은 '15~'19 중기계획에서와 같은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을 지속 추진하고 새로운 의무지출이 도입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지속된다면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관리가능할 전망이다.
 - 그러나, 사회보험부문은 기금고갈 등으로 현 제도 유지시 지속 가능성이 어려울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2060년 국가채무비율 40% 이내로 관리, 지속적인 세출구조조정 없을 경우 60%까지 상승 가능,” 보도자료, 2015. 12. 4, p.2.

Ⅲ. 향후 재정준칙 입법과정에서 유의할 사항은 무엇인가?

1. 2060년까지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목표로 설정

- 재정준칙은 재정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장기재정전망의 최종 년도에 대한 목표치 전망을 설정한 후 2030년, 2040년 등 매 10년 단위의 중기 목표를 제시하는 방식이어야 함.

- 2060년 이후의 국가채무비율의 목표치는 장기재정전망을 기초로 하되, 우리나라의 경제적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전망할 필요가 있음.
 - 국가채무비율의 적정 수준은 정부의 발권력, 징세력 그리고 재정관리역량에 결정적으로 좌우됨.
- 복지국가의 대명사로 불리우는 북유럽 노르딕 국가들의 정부채무 비율이 45~50% 이내에 있음을 유념하여 장기재정전망의 국가채무비율 목표치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표 3> OECD 국가들의 GDP대비 정부채무 비율(2017년)

비율	기축통화 국가	비기축통화 국가
130% 이상	일본(223.2), 그리스(188.7), 이탈리아(152.6), 포르투갈(145.4)	
110~130%	프랑스(124.3), 벨기에(121.9), 영국(116.9), 스페인(114.7)	
80~110%	미국(106.2), 오스트리아(94.9), 슬로베니아(88.3)	캐나다(94.2), 헝가리(91.4),
50~80%	아일랜드(77.2), 핀란드(73.3), 독일(71.5), 네델란드(70.0), 슬로바키아(58.2),	이스라엘(73.3), 폴란드(68.2), 아이슬란드(63.9), 멕시코(51.8)
50% 미만	라트비아(48.0), 리투아니아(47.8), 룩셈부르크(30.5), 에스토니아(12.6),	스웨덴(49.8), 뉴질랜드(49.5), 덴마크(48.9), 한국(44.5) , 체코(44.0), 스위스(42.9), 노르웨이(42.8), 호주(42.6), 터키(35.2), 칠레(29.7)
평균	98.3%	54.5%

2. 정권별 재정성과의 종합평가가 가능한 재정준칙의 설정

- 재정준칙을 통해 정권별 재정성과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하며, 또 정권별 재정성과는 재정운용에 관한 다양한 지표들이 종합적으로 반영될 때 정확하게 평가될 수 있음.
- 정권별 재정성과를 적절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국가채무비율뿐만 아니라 주요 공기업 부채, 미래 재정부담(연금개혁 등), 재정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음.
- 과거 정부들의 재정성과를 국가채무비율의 증감에 한정하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공기업부채의 증감, 연금개혁, 재정규모 등 다양한 재정지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것이 바람직(표 4> 참조).

- 국가채무비율의 증감만을 비교하면 재정성과의 순위는 ①노태우(-4.4), ②전두환(-3.3), ③김영삼(0.1), ④이명박(3.5), ⑤박근혜(6.0), ⑥김대중(6.2), ⑦노무현(11.1) 등과 같음.
- 국가채무와 공기업부채를 동시에 감안하는 경우 재정성과의 순위는 ①박근혜(1.3), ②김대중(5.8), ③이명박(14.6), ④노무현(15.2) 등과 같음.
- 국가채무, 공기업부채 이외에도 연금개혁의 성과, 재정규모의 축소 등이 중요한 재정성가로 감안될 수 있을 것임.

<표 4> GDP대비 재정지표의 정권별 비교(1980-2017, 구계열 GDP)

대통령	집권 연도	GDP 성장률	재정규모 ¹⁾	국가채무	주요 공기업부채 ²⁾	연금개혁 ³⁾
전두환	1980~1987	8.6	23.1→19.5	19.0→15.7	n.a	-
노태우	1988~1992	9.1	19.5→23.2	15.7→11.3	n.a	-
김영삼	1993~1997	7.8	23.2→23.3	11.3→11.4	n.a→11.2	공무원연금 기여율 증가
김대중	1998~2002	5.3	23.3→26.2	11.4→17.6	11.2→10.8	공무원연금 기여율 증가
노무현	2003~2007	4.5	26.2→29.8	17.6→28.7	10.8→14.9	국민연금기금소진 13년 연장
이명박	2008~2012	3.2	29.8→32.7	28.7→32.2	14.9→26.0	공무원연금적자 40% 감축
박근혜	2013~2017	3.0	32.7→32.5	32.2→38.2	26.0→21.3	공무원연금적자 40%(497조) 감축

주1: 재정규모는 OECD 통계의 일반정부 'total disbursements'

주2: 10개 비금융공기업(LH, 한전, 석유공, 도공, 광진공, 석탄공, 가스공, 수공, 철도공, 철도시설공단)

주3: 공무원연금개혁의 효과는 행정안전부(2009), "공무원연금 이렇게 바꿉니다": 인사혁신처(2016), 「2015년 공무원연금개혁 백서」 참조. 2007년 국민연금 개혁으로 기금소진연도 2047년에서 13년 연장(약 1,005조원 감축으로 평가 가능)

- 특히 우리나라는 GDP대비 비금융공기업 부채(23.6%)가 2013년의 일본(31%), 포르투갈(5%), 캐나다(15%), 영국(3%), 호주(9%), 멕시코(6%) 등과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준임.
- 금융공기업 역시 직접적인 재정위험이 될 수 있는데, 금융공기업을 포함한 공공 부문 전체에 대한 통계는 국제비교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2019년 현재까지 공개되지 않고 있음.
 - 금융공기업(13개) 부채의 GDP대비 비율은 2015년 72.4% (1,131.8조원), 2016년 69.0%(1,132.3조원)인데, 우리나라가 여타 선진국들에 비해 매우 높

을 것으로 추정됨.

- 금융공기업 13개가 우리나라 금융법인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7%인데, 유럽 국가들의 평균은 대략 8.1%임.

※ 독일(23.9), 포르투갈(23.5), 스위스(22.5), 아일랜드(11.7), 핀란드(9.2), 네델란드(6.9), 이탈리아(6.0), 스웨덴(5.9), 노르웨이(5.6), 프랑스(4.2), 덴마크(1.9), 스페인(1.9), 영국(0.0)¹⁾

- 어쩌면 우리나라에서 일반정부의 부채 비율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일반정부로 분류되어야 할 많은 기관들이 공기업(비금융, 금융)으로 분류되기 때문인지도 모름.
- 공공기관(공기업)에서 제외되는 특수법인들도 재정위험을 초래하기에 이에 대한 주의도 반드시 필요함.
 - 특수법인 위험관리 실패의 대표적 사례는 미국의 Fannie Mae, Freddie Mac 등 GSE(Government Sponsored Enterprises)

3. 정치인들의 재정준칙 준수를 누가 감시할 것인가?

- 국민주권의 대의민주체제 하에서는, 투표권자인 선거구민들이 자신의 다양한 요구를 경쟁적으로 제시하고 정치인들은 당선 욕구 때문에 선거과정에서 포퓰리즘의 재정운용 유혹을 필연적으로 받게 됨.
 - 선거과정에서는 그 누구도 정부의 재정총량 제약을 강하게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들은 재정환상(fiscal illusion)을 갖게됨.
 - 득표를 의식해야 하는 정치인들은 비록 미래세대에 막대한 재정부담을 지우는 정책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임기 중에는 포퓰리즘 정책들을 선호
- 재정포퓰리즘이 유권자들의 정치적 선택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엄격하고도 유연한 ‘재정준칙’과 함께 이를 감시할 수 있는 ‘정치중립적 감시기능’이 확립되어 건전한 국민여론을 형성할 수 있어야 함.
 - 다수의 OECD 국가들은 의회예산처, 행정부의 독립위원회 등 다양한 형태의 정치중립적 감시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 지나치게 엄격한 재정준칙은 금융위기 등 불가피하고 부득이한 경제상황에서 재

1) Schmit, Mathias, Laurent Gheeraert, Thierry Denuit, Cédric Warny, *Public Financial Institutions in Europe*, European Association of Public Banks A.I.S.B.L(EAPB), 2011. 참조.

정운용의 경직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보완적인 예외규정을 마련하여 사후적으로 조정가능하고 또 이를 감시하는 정치중립적인 기능이 필요함.

- 정치중립적 기능의 핵심은 재정운용에 대해 건전한 여론을 형성하는 것으로서, 정치인과 정당들의 건전하지 않은 정책과 공약에 대해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공하여 선거과정에서 여론상의 불이익을 줄 수 있어야 함.
- 정치중립적 기구가 개인간, 집단간, 세대간에 참여한 재정운용 이슈들을 구체적이고도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음.

※ “대표없이 과세없다”

- 우리나라에서도 1987년 대통령 직선제 이후 매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구성되어 국정과제별 재원소요가 추계되고, NABO의 장기재정전망이 이루어지면서 재정환상이 점차 드러나고 있음.
 -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후보는 소위 ‘공약가계부’라는 이름으로 공약사업과 재원대책을 발표하였으나 이후 검증이 이루어지지 못함.
 -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도 「국정운영 5개년계획」에서 주요 공약을 토대로 한 국정과제들의 재정소요와 재원확보방안을 제시하였으나 역시 그 검증이 진행되고 있지 않음.
- NABO는 2012년부터 장기재정전망을 공개적으로 발간하는 등 적극적으로 재정 이슈들을 제기해왔으나, OECD(2016)는 NABO의 정치적 독립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음.
 - “NABO가 직면한 잠재적인 도전과제 중 하나는 처장이 고정된 임기를 갖지 않는다는 것이다. 매 2년마다(국회의장이 바뀔 때) NABO 처장이 자발적으로 사임하는 현재의 관행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때 이상한 것이다. NABO의 리더십은 국회의장의 요구에 따라 그리고 국회의장이 대표하는 정치적 이익에 따라 좌우되는, 또는 좌우된다고 인식되는, 그러한 위험이 존재한다.”
- NABO의 독립제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와 유사한 거버넌스 체제로 변경하여, 재정운용에 대한 정치중립적 견제기능이 작동하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음.

| 토론2 |

고삐 풀린 국가재정, 이대로 괜찮은가?

- 김상겸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고삐 풀린 국가재정 이대로 괜찮은가?’에 대한 토론문

단국대 경제학과 김상겸

<현 상황의 인식>

(1) 경기침체의 심화

- 우리나라 경제는 현 정부 집권이전부터 침체기조를 보이고 있었으나, 집권 초기 소득주도성장 정책 등의 도입으로 큰 타격을 입은데 이어, 최근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마이너스 성장을 우려해야할 상황으로 악화되었음

(2) 전통적 건전재정 기조의 와해

- 경제위기 시에는 재정이 가장 신속하게 동원할 수 있는 대응정책이며, 현 정부 역시 유례없는 대규모 재정을 동원하여 대응하고 있음
- 재정의 위기대응 능력은 재정여력이 충분할 때 가능한 것인데, 현 정부가 안고 있는 문제는 집권초기부터 재정여력을 급격히 소진하고 있었다는 점임
 -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건전재정 기조 속에 재정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해 왔으나 현 정부들어 재정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음

<현 정부 재정정책의 문제점>

(1) 대중영합적 재정만능주의의 일상화

- 재정만능주의란 학술적 표현은 아니지만, ‘국민이 원하는 것 모두 정부가 해준다’는 식인 현 정부의 정책기조를 빗댄 표현임.
- 외형적으로는 국가책임주의라는 고상한 말로 포장되어 있으나, 사실은 국가재정을 동원해서 유권자의 환심을 사고자하는 정치우선적 행위이며, 보다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포퓰리즘임.

-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에서는 ‘공공의 이익’을 명분으로 재정지출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높아지고 있으며, 현실에서는 ‘공익추구’나 ‘시대정신’ 등의 그럴듯한 명분으로 정당화하고 있음
- 정부의 재원이란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되는 것인데, 마치 부자가 선심쓰듯이 합의 없이, 숙고 없이 지출되고 있음

(2) 정책실패를 덮기 위해 재정을 대규모로 투입

- 과거의 경제정책을 모두 실패한 것으로 규정하고, 검증되지 않은 ‘소득주도 성장’을 강행하고 있으나 가시적인 효과는 관찰되지 않음
- 소주성은 성장정책 보다는 재분배 정책에 가깝지만, 소득격차는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상황
-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52시간제의 도입 등으로 경기침체가 더 가중되고 있으며, 고용상황 역시 역대 최악의 수준(고용의 양적, 질적 저하)
- 현 정부는 이러한 정책실패를 희석하고자 재정지출을 지속적이고도 급격하게 증가시키고 있음
- 막대한 규모의 일자리 예산투입은 물론, 과거 후진적 토건경제라고 비난하던 SOC 투자를 대규모로 추진하고 있음. 이를 위해 예타면제는 물론 예타 탈락사업들을 부활시켜가면서 낭비적 지출을 강행하고 있음
 - 경제성적표 개선을 위해 비효율적 지출을 지속함
- 최근에는 코로나 사태 대응을 명분으로 무제한적 재정동원도 모색됨
- 전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시재정에 준하는 편성과 지출을 요구하고 있음
 - 전시재정이란 동원가능한 자원을 내일이 없다는 식으로 퍼붓는 그야말로 막가파식 재정운영임. 집권당과는 달리, 국가와 국민은 내일도, 그 이후에도 살아야 함

(3) 재정적자의 심화 및 국가부채 급증 유발

- 가정경제와 마찬가지로 국가/정부 역시 수입보다 지출이 더 크면 적자가 발생. 재정만능주의는 필연적으로 재정적자를 심화시키며, 결국 국가부채의 심화로 이어지고 있음
- 현 정부와 이에 동조하는 일부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국가부채 수준이 OECD 국가들에 비해 낮음을 근거로 하여, ‘아직 안정적이고 더 써도 문제없다’는 식으로 주장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안정적이다 라고 판단할 근거가 별로 없음
 - D3는 60%를 넘은지 오래(공기업의 빚은 결국 정부의 책임), 연금총당액 까지 포함하면 GDP의 100% 수준
 - 일본, 미국 등 고부채국가들에 비해 우리 부채수준이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은 기축통화를 갖은 나라들임 (CDS premium 비교, 일본 22, 미국 15, 한국 35, 터키(27%) 496)
- 적어도 국가재정 차원에서 적정수준의 부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함. 빚이란 본질적으로 절대 안정적일 수 없으며,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이는 더더욱 그러함
 - 적정수준의 부채란 존재하지 않으며, 관리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에 대한 논의만 존재하는 것임.
 -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나랏빚을 더 내서라도 기어이 돈을 써야한다고 주장함
- 향후 우리나라 나랏빚은 구태여 더 늘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더 늘어나게 될 것임. 왜냐하면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임
- 국가부채의 증가는 국가경제 운영 및 지속가능성에 결정적인 장애요인이며, 경제위기의 직/간접적 원인을 제공하기도 함 (PIIGS countries)
- 실제로 경제위기 발생시, 가장 효과적인 대응방안이 재정을 동원하는 것인데, 적자심화란 가장 유용한 대응수단을 미리/스스로 포기해버리는 것임
- 이를 막기 위해서 세계각국이 도입하고 있는 것이 엄격한 재정준칙과 준수인데, 우리나라는 실질적인 재정준칙이 작동하고 있지 않음
 - 국가재정법 제5장, 재정건전화법의 입법무산

(4) 현 정부의 재정운영은 현재 세대가 다음 세대를 착취하는 방식

- 국가부채 증가를 용인하는 정책은, 결국 미래세대의 고단함을 담보로 현재 세대의 편안함을 취하겠다는 것임
- 현재 세대가 물려준 거대한 빚은 미래 세대에게는 큰 짐임
 - 우리 자식세대는 자기들은 본적도 쓴 적도 없는 돈인데, 방만한 부모를 둔 탓에 시작 단계부터 빚지고 인생을 시작하는 셈인 것임
- 그런데 이는 어른으로서 해서는 안되는 비윤리적 선택임
 - 아이들 호주머니 털어서 어른이 쓰겠다는 식
 - 나 편하자고, 자식들에게 빚더미를 안겨주는 것이 책임있는 어른의 선택인지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함.
-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설득해야하는데 도외시하는 것은 물론, 더 심각하게는 이를 조장하고 있음
- 현 정부만의 문제만은 아니지만, 소위 진보/좌파 성향의 정부들이 이러한 경향이 더 강함
 -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이러한 행동을 하길 바라는 것은 어려우므로, 책임과 양심있는 정부라면 이러한 좌파적 선동에 휘둘러서는 안되는 것임
- 적자국채발행 등으로 조달한 코로나 재난금 역시, 경제담당 부처 등을 중심으로 우려를 표명했지만 총선 등을 의식하여 강행
 - 시행전 나라살림을 걱정하는 국민여론이 높았으나, 오히려 '착한소비' 라는 식으로 정당화함

(5) 국민인식의 오류: 정부가 시장보다 우월할 것

- 재정만능이나 정부만능 견해는 정부는 항상 시장(또는 민간)보다 우수하다는 오류에서 발생
- 사실 정부지출이란 민간의 손에 쥐어져있는 돈을 정부가 가져다 쓰는 것에 불과

- 정부가 대신 쓴다고 하여 돈의 규모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므로(사실은 감소함), 이는 같은 돈의 '손바뀜'에 불과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돈을 쓰는 것은, 정부가 쓰는 경우에 민간에 맡겨두었을 때보다 그 성과가 우수한 경우가 '더러' 있기 때문
 - 이것을 경제학에서는 시장의 실패라고 하고, 재정승수이론 역시 일맥상통하는 것임
- 현대 경제학에서 제시하는 '시장기능을 활성화해야한다', '민간의 효율성을 활용해야한다'는 식의 결론은 정부의 개입이 능사가 아님을 지적하는 것
- 많은 이들이 정부는 항상 옳고, 유능하고, 심지어 절대선이라고 믿고 있지만, 실제로는 민간과 시장이 우수한 경우가 더욱 많음
 - 중요한 것은 정부가 항상 우월하지는 않음을 깨닫는 것
- 문제는 이에 대한 교육과 계도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방안>

- 가계와 마찬가지로 재정건전화를 회복하는 것은 수입>지출, 더 바람직하게는 수입=지출 수준을 만드는 것임
- 민간이 부담을 느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금을 걷고, 효과성이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우선순위에 입각해서 돈을 쓰는 것임
-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발제문의 끝부분, 건전재정의 길 12대 원칙에 제시되어 있음. 이대로만 하면 된다고 생각함.
- 이 가운데 재정준칙의 도입이 시급함을 지적하고자 함.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국가들을 보면 대부분 잘 구축된 재정준칙을 가지고 이를 엄격히 집행하는 국가들임. 우리는 재정준칙의 성격조항이 국가재정법에 일부 구현되어 있기는 하지만,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움.

| 토론3 |

고삐 풀린 국가재정, 이대로 괜찮은가?

- 김창배 여의도연구원 경제사회정책실장 -

토론문_“고삐 풀린 국가재정, 이대로 괜찮은가?”

김창배 연구위원(여의도연구원)

1. 악화일로의 국가재정

□ 전대미문의 확장재정으로 재정건전성 훼손에 대한 우려 집중

- 2020년 9%대 초슈퍼예산에 3차례 추경(규모, 횟수면에서 최대 기록)
 - 2020년 총지출 예산은 9.1%로 2019년(9.5%)에 이어 9%대로 편성
 - 정부 3차 추경안 35.3조원 제출
 - ◆ 1차(11.7조원), 2차(12.2조원)를 더하면 올 추경 총액은 59.2조원
 - ◆ 올해 본예산(512.3조원)의 11.6%
 - ◆ 이 경우 2020년 총지출 증가율은 무려 16.5%
- 이로 인해 재정건전성 크게 약화
 - 2020년 국가채무비율은 43.5%로 전년(37.1%)대비 6.4%p 급등
 -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대비 5.8%, 20년 국가채무 순증 99.4조원
 - ◆ 재정적자 이전 최고기록은 외환위기 때인 1998년 -4.7%

<도표 1> 3차 추경안과 국가 재정

	'19년 본예산 (A)	'20년			
		본예산	추경		
			1차	2차(B)	3차(C)
◇ 총 수입	476.1	481.8	481.6	482.2	470.7
(증가율)	(6.5)	(1.2)	(1.2)	(1.3)	(Δ1.1)
◇ 총 지출	469.6	512.3	523.1	531.1	547.1
(증가율)	(9.5)	(9.1)	(11.4)	(13.1)	(16.5)
■ 통합재정수지	6.5	Δ30.5	Δ41.5	Δ48.9	Δ76.4
(GDP대비,%)	(0.3)	(Δ1.5)	(Δ2.1)	(Δ2.5)	(Δ4.0)
■ 관리재정수지	Δ37.6	Δ71.5	Δ82.0	Δ89.4	Δ112.2
(GDP대비,%)	(Δ1.9)	(Δ3.5)	(Δ4.1)	(Δ4.5)	(Δ5.8)
■ 국가채무	740.8	805.2	815.5	819.0	840.2
(GDP대비,%)	(37.1)	(39.8)	(41.2)	(41.4)	(43.5)
※ 국가채무 순증	32.6	64.4	74.7	78.2	99.4

자료: 기획재정부

□ 하지만 정부 및 여당은 여전히 재정건정성이 양호하다는 인식

○ 대통령 "지금 우리의 국가채무비율은 2차 추경까지 포함해서 41% 수준이다. 3차 추경까지 하더라도 110%에 달하는 OECD 평균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

○ 재정책대를 통해 성장률을 높이면 재정건정성이 회복된다는 '좋은 부채론' 주장

- ◆ 대통령 "길게 볼 때 (재정책대)가 GDP대비 국가채무비율 악화를 막는 길"
- ◆ 민주당대표 "국가채무의 총량보다 GDP총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
- ◆ 경제수석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성장률 지탱하는 것이 재정건정성을 지키는 방법"

※ 지난 5월 25일 대통령 주재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의 발언내용

2. 40%→45%→60% 국가채무비율 높아져도 괜찮은가?

□ 기축통화국 vs. 비기축통화국

○ 기축통화국이 아닌 선진국들은 대부분 채무 비율을 낮게 유지

- 기축국: 미국(107%,2018), 일본(222%,2017), 프랑스(122%,2018)
- 비기축국: 뉴질랜드(49%,2018), 호주(43%,2018), 노르웨이(46%,2018), 덴마크(47%,2018), 스웨덴(48%,2018) 등

○ 비기축국의 채무비율이 기축국인 미국 수준으로 높아진다면?

- 국제 금융시장에서 미국 정부의 채권은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투자수요가 높지만 한국 채권은 위험도가 높아 금리가 급등할 가능성
 - ◆ 국채 조달 비용이 증가할 뿐 아니라, 국책은행과 민간 기업의 신용등급에도 줄줄이 악영향을 미치면서 가계 기업에 까지 피해
 - ◆ 원화가치 하락으로 외국인 자본유출이 가속화 가능성
-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비율이 46%가 넘으면 국가신용등급 하락을 경고

□ 국제비교 통계의 함정

○ 우리나라의 재정 건정성이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OECD통계가 자주 언급한 것으로 보이지만 단순비교에는 신중해야 할 필요

- 일례로 대통령이 언급한 OECD 평균 채무비율 110%은 OECD를 한 나라로 보고 채무비율을 계산한 것으로 경제 및 채무 규모가 큰 나라가 비율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됨. 각국 채무비율을 평균하게 되면 82.46%

<도표 2> OECD 일반정부 채무비율: Average Vs. Tot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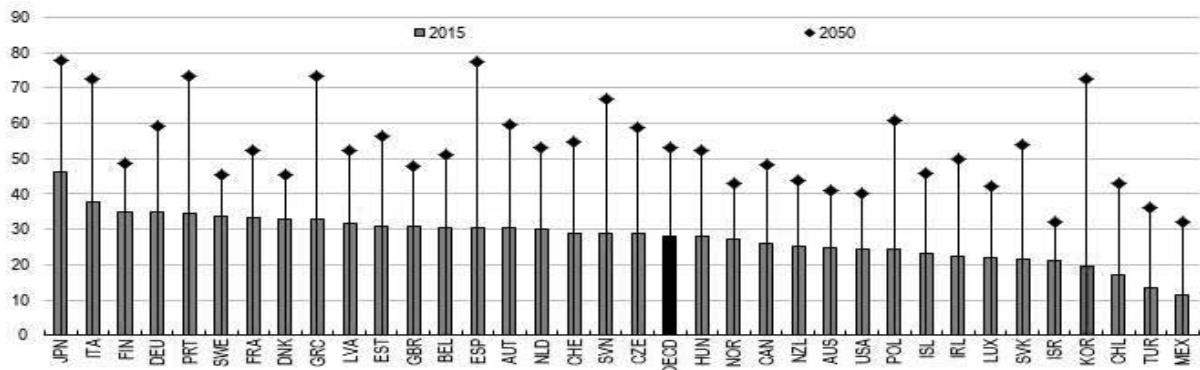
Indicator	General government gross debt as a percentage of GDP				
Year	2007	2015	2016	2017	2018
Country					
OECD - Average	52.87	85.27	84.88	82.46	...
OECD - Total	73.05	111.53	112.48	110.31	...

Data extracted on 04 Jun 2020 07:20 UTC (GMT) from OECD.Stat

- '숨겨진 빚' 공기업 부채를 포함하면 이미 60%를 넘어 70%에 육박
 - 국가채무는 회계기준, 포함대상에 따라 D1, D2, D3로 나뉘는데 국가 간 비교에서 사용되고 있는 채무 기준은 D2로 여기에는 공기업 부채가 미포함
 - 지난해 말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8년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387.6조원으로 전년대비 9.1조원 증가
 - ◆ 이를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D3)는 2018년말 GDP 대비 57%
- 초고속 고령화 감안하면 한국의 재정 건전성은 취약
 - 독일은 1970년대 고령사회(65세 인구 비중이 14%이상)에 진입할 당시 국가채무 비율이 20%도 되지 않았고, 프랑스,덴마크, 스웨덴도 30% 미만
 - 하지만 2017년 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의 당시 국가채무비율은 43.2%
 - 향후 고령화 속도가 빨라 부담도 급증할 것으로 우려. OECD에 의하면 한국의 노인 부양비(생산가능인구 100명당 65세 이상인구)는 2015년 19.4명에서 2050년 72.4명으로 45년간 약 3.7배 증가
 - ◆ OECD 평균: 27.9명(2015년) → 53.2명(2050년) : 1.9배
 - GDP 대비 복지 지출은 2017년 10.6%로 EU 평균(25.4%)의 절반에 못 미치지만, 2060년에는 EU 평균(27%)을 넘는 28.6%에 달할 것으로 전망

<도표 3> 노인부양비율 급등 (2015→2050)

단위: 명(생산가능인구(20-64)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



자료: OECD (2017), Pensions at a Glance.

3. 재정건전성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 재정건전성 회복 방향

- ▽총지출 감소, ▽총수입 증가, ▽명목GDP증가

- ◆ 국가채무비율(%) =
$$\frac{\text{국가채무액}(=\sum \text{총지출} - \sum \text{총수입})}{\text{명목GDP}}$$

① 총지출감소 ⇐ 과감한 지출구조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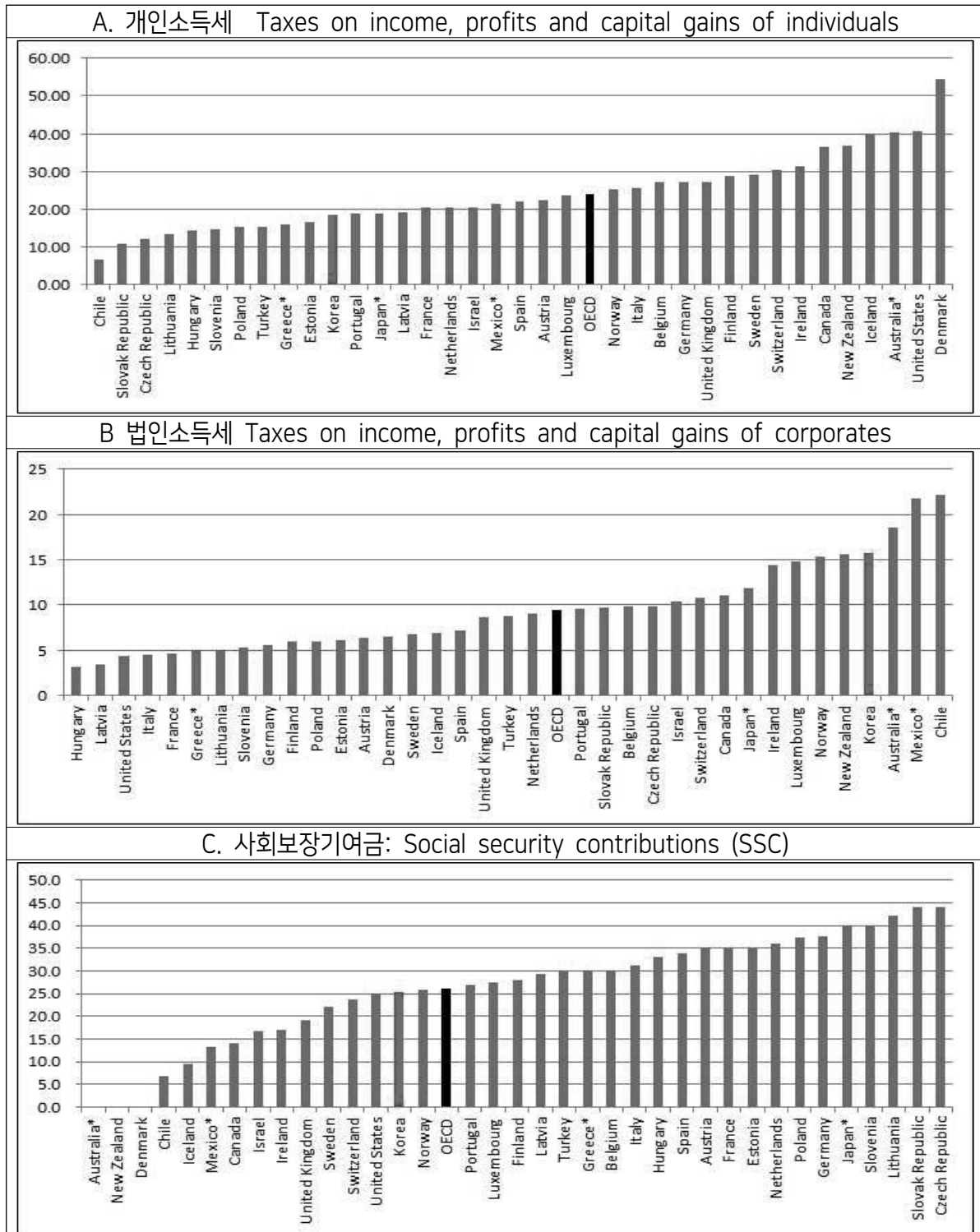
- 국가적 우선순위, 재정사업 적절성에 입각해서 기존 사업의 과감한 정리
- R&D, 중소벤처육성, 교육훈련 등 미시적 차원에 더 집중해 재정 효율성 제고
- 재정 유연성 확보를 위한 의무적 지출 총량 제어
- 복지 전달체계의 개선 노력을 병행
 -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에 대비 공공지출 비중은 0.4배로 OECD 회원국 평균의 0.6배에 비해 낮은 편으로 비효율적으로 조세가 운용되고 있음을 시사
- 무조건부 복지에 최소한의 반대급부를 부가함으로써 재정절감 효과를 추구
 - 예를 들어 고교 무상급식, 아동수당 지급 시, 해당 정책에 대한 수요자들의 반응 등 효과 검증을 위한 최소한의 설문조사를 의무화하는 방안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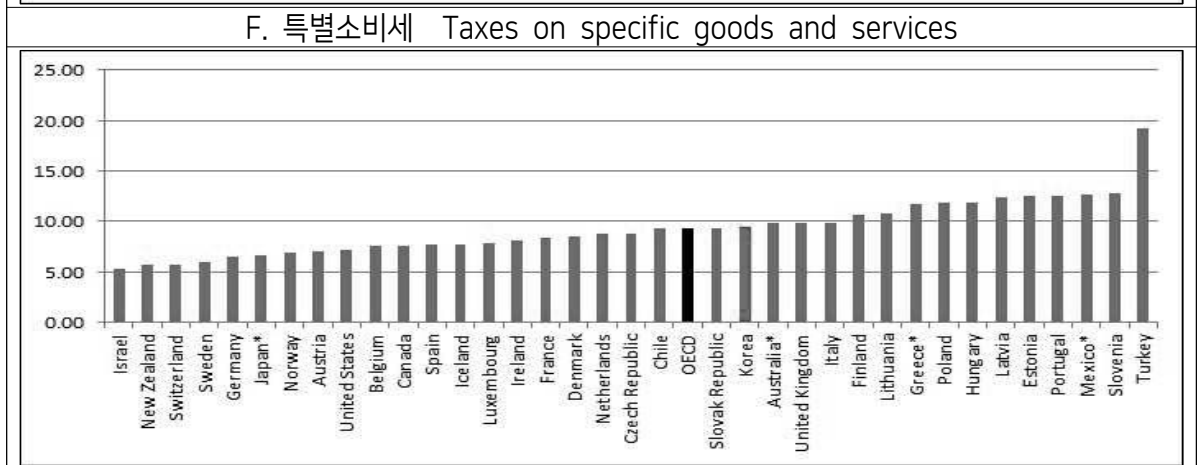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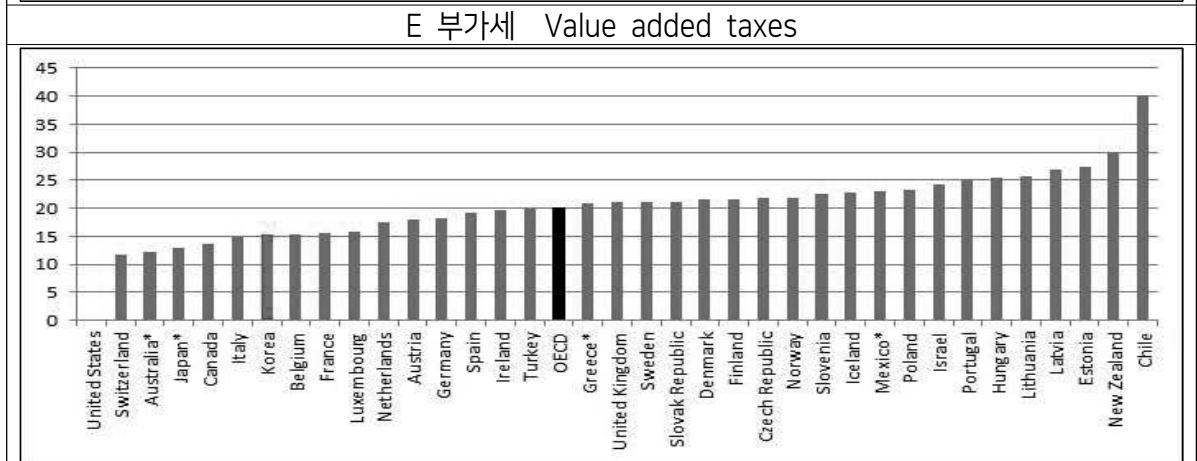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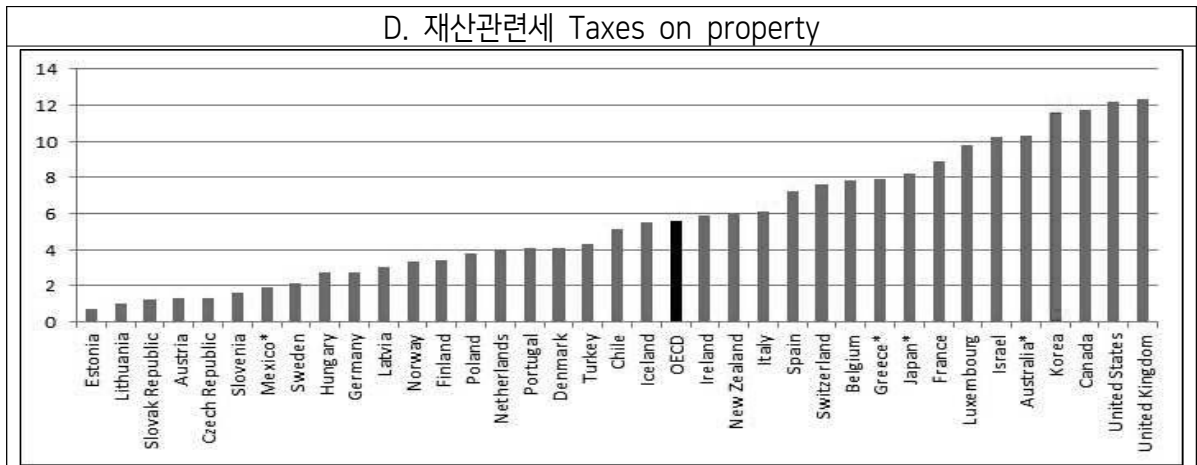
② 총수입증가 ⇐ 세제개혁, '넓은 세원, 낮은 세율'

- OECD 대비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낮아 증세 여지가 있지만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조세 대원칙에 입각한 세제개편과 세입 확충이 필요
 - 세수 항목별 비중을 고려해 개인소득세와 부가세는 늘리고 법인세와 재산 관련 취·등록세 부담은 낮추는 방안 검토

<도표 4> 한국과 OECD의 세수구조 비교

단위: % of 전체 세수, 2018년





③ 명목GDP 증가 ⇐ 재정승수 제고 ⇐ 반(反)시장 정책들과 과감히 결별

○ 신산업의 발전을 막는 기득권 규제 개혁

- 특히 이번 코로나 경험은 원격의료, 원격수업의 확대가 산업적 측면뿐 아니라 집단감염확산 방지, 수업일수 확보 등 향후 반복될 감염병 위기 대응차원에서 필요한 과제임을 보여줌

○ 고용유연성 확보 등 노동시장 개혁

- 한시적 허용한 특별근로 연장을 넘어 구조적으로 고용을 어렵게 하는 최저임금 및 근로시간 규제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

○ 징벌적 '편가르기'가 아닌 경제효율적인 세제시스템 구축

- 글로벌 추세에 역행하면서까지 법인세 및 소득세율을 인상한 것은 기업, 가진자에 대한 징벌적 '편가르기'와 다름없음

④ 엄격한 재정준칙 법제화

○ 정부의 '유연한' 재정준칙에 대한 우려

※ 홍남기 부총리, “한국적 상황을 고려한 유연한 재정준칙이 필요하다”

-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인 지침으로 인식될 여지

○ 실효성 있는 재정준칙이 되려면 최소한 국가채무비율,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수준이어야 할 것

<도표 5> 21대 국회, 재정건전성 관련 발의 주요 법안

법안 및 발의인	주요 내용
재정건전화법안 (류성걸의원 대표발의)	(국가채무비율: 45%) '45% 초과시 세계잉여금을 국가채무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데 모두 사용'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 2%) '관리재정수지의 적자를 국내총생산액의 100분의 2 이하로 유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대표발의)	(국가채무비율 45%) 45% 초과시 5회계연도 이내의 기간 동안 감축 계획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 3%) '관리재정수지의 적자를 국내총생산액의 100분의 3 이하로 유지'



🔍 주제발표

- 박형수 연세대 경제학과 객원교수 (前통계청장 / 前조세재정연구원장)
“무너지는 재정건전성, 문제점과 회복방안”
-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한국의 재정승수, 추정과 시사점”

🔍 종합토론

- 옥동석 인천대 무역학과 교수(좌장/前조세재정연구원장)
 - 김상겸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 김창배 여의도연구원 경제사회정책실장
- 